

# "행복캡슐"

JW그룹이 세상의 건강한 미래를 담겠습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습다. 단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걸어온 70여년.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R&D 기술력과 생명존중의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미래를 행복캡슐 안에 담겠습니다.



**JW** 그룹

**JW** 홀딩스

**JW** 중외제약

**JW** 신약

**JW** 생명과학

**JW** 메디칼

**JW** 산업

2018년 경실련은 초심에서 시민을 다시 생각합니다.  
2017년 시민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을 위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2018년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경실련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경실련 | 공동대표 선월몽산 김대래 중앙위원회의장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채원호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발행 2018년 1월 31일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omepage : http://www.ccej.or.kr

## CONTENTS

### 동승동 칼럼

- 6 부동산 정책, 밀당 말고 일관성이다 / 윤순철

### 신년인사

- 8 20대 활동가들이 전하는 새해 새소망

### 이슈리포트

- 14 공수처 설치!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 정택수

### 시사포커스

- 24 ① 주거복지로드맵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 최승섭  
27 ② 보편요금제, 보편적 통신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 / 권태환  
29 ③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 꾸준한 실질화 노력 필요 / 오세형  
32 ④ 벼랑 끝 농업, 켜켜이 쌓인 문제 털어내야 할 때 / 최예지  
37 ⑤ 흔들리는 망 중립성, 지켜야 할 원칙이다 / 윤철한  
39 ⑥ 상업엔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남은경  
44 ⑦ [자치분권 시리즈칼럼 13]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 이훈전



14 이슈리포트  
공수처 설치!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32 시사포커스  
벼랑 끝 농업,  
켜켜이 쌓인 문제 털어내야 할 때

### 현장스케치

- 48 ① 2017년 좋은기업, 좋은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 이상윤  
51 ②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통일 이야기 / 조성훈

### 지역이야기

- 54 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민하다 / 권용범  
57 ② 속초시 난개발 이제 시민이 막는다 / 김경석

### 우리들 이야기

- 60 ① '2017년 신입회원의 밤'이 성황리에 열렸어요! / 윤은주  
67 ②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기업 - 공감씨즈 인터뷰 / 윤은주  
76 ③ 동지내몰림 시리즈 1편 - 궁중족발 인터뷰 / 윤은주  
84 문화산책 - 아이 엠 히스 레저, 27클럽, 그리고 종현 / 장혜승

###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공

- 86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87 경실련 일일보고  
90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67 우리들 이야기  
좋은사회적기업 공감씨즈 인터뷰



76 우리들 이야기  
동지내몰림  
- 서촌 궁중족발 인터뷰

## 부동산 정책, 밀당 말고 일관성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자 권력자들의 탐욕의 실체가 벗겨지고 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들인 묵은 때가 씻겨가고 있지만 부동산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권의 성패를 좌지우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10개월 동안 청와대, 정부, 여당은 보유세, 후분양제, 재건축 연한 등 각 기관들이 각자가 쥐고 있는 권한으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보니 엇박자를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호사가들이 참여정부 정책 트라우마 때문이라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청의


정책 엇박자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문제의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말고 풀릴 것이 없다”던 참여정부가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정책의 일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정책기조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단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현상을 쫓아 땀질하듯 대응하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참여정부를 되짚어 보면, 참여정부는 1990년대 WTO, OECD 가입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 등 세계화에 적절히 준비하지 못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고, 경제 파급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을 경기회복의 수단으로 삼아 경기부양의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만들어진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물려받았다. 한편으론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도 필요하였다. 한마디로 참여정부는 경제회복과 균형발전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다소 상충된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개별로 추진된 기업도시나 신도시 건설은 모두 전국토를 대상으로 벌이는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투기와 가격의 거품은 불가피하였는데 이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수록 부동산 거품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는 다시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을 주는 부메랑이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2005년 3월, 골프장 230개 허가나 기업의 접대비 실명제를 비판하는 등 대표적 부동산 경기

부양론자였던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해일처럼 밀려온 여론에 장수 떠내려 보냈다.”며 아쉬워했던 것은 균형개발과 부동산 안정의 상충된 목표를 추구하던 참여정부의 고충을 극명하게 드러낸 백미였다. 결국 2006년 12월,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풀릴 것이 없다.”며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할수록 세금폭탄, 버블세븐, 강남불패, 종합구명세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통하지 않으니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시장 실패의 치유자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의 실패는 참여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을 제정하면서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하고, 1967년 11월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도입된 이래 역대 정부는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이라는 냉온탕을 오가는 대책들을 수없이 발표하였다.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과다하게 유입되어 경제에 부담을 주면 규제 강화를 반복하여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시장은 불패한다는 신화를 만들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일관성에 있다.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지름길도 일관성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지향을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미 절반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지향은 무엇인지 자신의 임기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대책들이 많은 데 이거 안 통하면 더 쉼 거 내놓겠다”는 시장과 밀고 당기는 밀당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 분야만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같이 구조적 개선이 정말 필요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지향과 일정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단을 제시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정책 시행의 예측이 가능하여 국민들이 자산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정부 정책에 맞춰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근본이 서 있을 때 밀당도 효과가 있다. 정부의 정책 수립 전환을 간절히 기대한다. 



# 20대 활동가들이 전하는 새해 새소망



2018  
무술년

처음처럼,  
모두에게 설레는 매일이 있기를



최윤석 기획교육팀 간사

처음 혜화에 왔을 때를 떠올리면 우선 마로니에 공원 은행나무의 풍성한 녹엽부터 생각합니다. 그 앞들이 시나브로 셋노랑게 무르익어 하나둘씩 발치에 쌓이더니, 이내 가을을 쓸어 담은 싸리비소리마저 사라진 자리엔 이제 차렵이불처럼 소복이 덮인 눈송이가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원이 색을 바꾸는 사이 저는 '수습' 딱지를 떼고 정식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풍경과 함께하는 출근길은 늘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출근길'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사회인들에게 형용모순에 가까울 테지만, 적어도 제게는 그 4개월여의 아침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문구였습니다. 그 길이, 제가 보장된 영화를 뒤로하고 이직을 결심한 후 취업의 긴 터널을 지나 경실련을 만난 과정과 닮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이 제게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원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꼭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힘차게 자맥질 해볼 생각입니다. 나아가 이듬해, 그 이듬해에도 초심을 간직한 채 소임을 다하여 언젠가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매일 아침, 경강선 여주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신새벽의 침묵을 뚫고 플랫폼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내 지상과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깊은 어둠으로 침잠합니다. 이후 2시간여의 긴 잠영.

열차는 압구정역을 지나서야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이미 동이 튼 지 오랜, 다시 만난 세상은 어느 조명보다도 눈이 부십니다. 열차가 어둠의 터널을 박차고 동호대교로 들어서면 시리도록 찬란한 한강의 윤슬이 생의 기쁨을 예고하고, 수 분 후 마침내 혜화역 출구 계단을 오르면 공원의 그득한 생동이 하루를 응원합니다.

-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 나는 한숨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 놓았다고

- 프로스트 작 '가지 않은 길' 中 -



박은영 대구경실련 간사

새해엔  
꽃길만 걷자!



## 진정한 적폐청산의 첫 번째 발걸음 : 우리의 끈대성 파괴하기

우리는 우리의 끈대성을 파멸시켜야한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적폐청산을 외치며 추운 겨울을 나누었던 2017년.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의 적폐는 은폐한 채, 적폐청산을 외쳐왔다.

대학교 조교와 대학원생들을 소멸시키는 대학교수는 시국선언을 하고, 젊은 인권활동가를 흑사시켜 활동가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선배 인권운동가들은

적폐청산 기구 출범에 조력하고,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없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는 누군가들도 촛불 하나둘씩 손에 들고 거리로 나왔다. 내 안의 끈대성을 외면한 채 말이다.

내 안의 숨은 끈대성을 발견해내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순순히 인정하고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실제 생활하는 주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정한 적폐청산의 길이다. 끈대성이 사라져 사회적 약자도, 낮은 계급의 사람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소하다고 치부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인권 침해가 없는 2018년을 희망한다. 🐾

김정숙 광명경실련 간사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광명 경실련에서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는 상근활동가 김정숙입니다. '광명'이라는 지역에 온 지도 어느덧 4년째가 되어 가고 있네요. 광명은 처음 독립하여 발붙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좋은 짝꿍을 만나 결혼하여 현재는 신혼을 보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짧지만 나름 추억과 의미가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광명경실련'을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

저는 '90년생 김정숙'으로 올해 20대 끝자락을 맞이하였습니다. 저에게 20대를 지나 30대로 들어 가는 길목에 있어 가지고 가야할 키워드 중 하나는 '청년'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20~30대의 처지를 나타내는 기사들과 글들이 수도룩하였습니다. 여전히 청년을 대변하는 단어들은 '취업, 결혼, 입사, 박탈감, 분노' 등 희망을 찾을 수는 있을지 막막 하지만 하고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도 같아 보입니다.

"광명은 메리트가 없어. 집값만 비싸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친구에게 광명으로 이사 오라 권유를 하니 돌아오는 답변이었습니다. 월급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과 교통비,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주거비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떠나 청년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청년의 문제들이 중앙이슈로 부각되자 지자체에서도 이미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년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의 다짐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봅니다. "내가 발붙이고 사는 광명에서 지역살이를 고민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중앙 이슈적·타 지자체의 정책에만 머물러 있는 청년 정책이 아닌 지역의 필요를 인식하여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짐 지었던 것들이 덜어지고 얽혀 있던 것들이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단지 하루가 지나 1년이 더해졌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해가 바뀌니 올 한해를 기대하고 다짐해보는 자세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인 듯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 진 자들의 짐을 나뉘드는 연대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요새 제 친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청약이죠. 저희 고향 주변에 대구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분양에 쫓겨나 봅니다. 농촌 지역이고 분양가가 높지 않아, 많이들 신청한 것 같습니다. 당첨 발표 날이 되면, 자기는 당첨됐네, 누구는 떨어졌네 하면서 아침부터 카톡방이 시끄럽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약률이 예상외로 높더군요. 전매제한이 아직 안 걸렸다는데요. 제 지인들 처럼 시세차익으로 한탕 해볼 요량인 사람이 많이 모인 듯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몇몇은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연애 기간이 오래인 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 나잇대입니다. 이들이 벌써 부동산 투기에 눈을 뜬 건 일편 이해가 됩니다. 일부 교사나 공무원인 친구를 빼고는,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습니다. 직장 생활에 희망은 보이지 않고,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 남들 하듯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겠죠.

저희 세대뿐이겠습니까. 개발이 시작되기 몇 해 전부터 어르신들이 모였다 하면, 어디 땅이 얼마에 팔렸더라,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흥 씨네 배밭을 서울사람이 샀더라 등 온통 부동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이 땅뿐인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높은 가격에 땅을 팔려는 걸 비난할 순



없죠. 아쉬운 건, 십 수년간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와 어울렸던 공간이 한순간에 갈아엎어지는데 돈 얘기만 오가니 쓸쓸하더군요.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이 분발해야겠죠. 땅과 집이 투기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인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혹은 경제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부동산 투기에 희망을 걸지 않으려면 사회 전반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청년들이 투기에 빠지지 않는 사회, 생활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따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기업·종교 등 사회 전반에 계시는 경실련 회원분들의 의지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김미진 충북·청주경실련 간사

### 파란나라를 꿈꾸다.

사무실에 1년 달력이 선물로 들어왔다. 길 것 같은 1년이라는 기간을 막상 한 눈에 보니 짧게 느껴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나는 정의를 위해 어떤 한 걸음을 걷게 될까. 두근거린다. 정의라는 단어가 낯설고 서먹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애들'인 나지만, 공동체를 위한 도리를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충북·청주경실련에 활동가로 들어왔다. 내 마음이 순진한 걸까?

나를 뒤흔들었던 사건을 돌이켜본다.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내가 외면해 온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물처럼 차올라 내 목까지 올라왔다는 걸 처음 봐 버렸다. 내가 보고 싶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파란나라는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만큼 이 세상은 아직 정의롭지 못했다. 영화 1987 속의 최루탄, 화염병 냄새를 모르는 나는 그렇게나 평화로웠던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도 낯설고 무서

웠다. 경제정의를 위협하는 것들은 다 너무 크고 어마어마했다.

이런 내가 잊지 않는 한 줄기 동아줄이 있다. 이곳에 들어올 때의 목표이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튼튼한 제도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내가 이런 목표를 품을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것은 지금의 사회, 이 길 위를 끝없이 걸어온 분들이 이룩한 현재이다. 앞선 분들의 한 걸음은 평화통일이라는 내 소망을 당당하게 했다.

내가 희망하는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시민으로써 존재하고 행동해야만 이루어지는 푸르른 나라다. 지난 세월 속 앞선 이들이 이룩한 길을 따라 2018년의 나 역시 그렇게 나아가려 한다. 정의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순진하지 않은 내 소망 역시 계속될 것이다. 🌸

새해 첫 영화로 '1987'을 봤습니다. 그동안 꺾직한 한국 근현대사들을 흥행 코드로 활용할 줄만 알았지, 짜임새 있는 작품성으로 잘 녹여낸 한국 영화가 없었기에 상영 전 시큰둥하게 좌석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먹먹한 마음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극중 악역인 박 처장(김윤석)은 계속해서 '네 까짓 게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김사가 기자에게, 기자가 교도관에게, 교도관이 대학생에게 전달하는 작은 희망의 몸짓들은 쌓이고 쌓여 평범한 시민들을 움직이고 결국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저토록 힘들게 얻어낸 산물이 87년 헌법 제제인데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평생 직장 신화는 깨진 지 오래고, 그마저도 불로소득이 노동소득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이는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로 일하는 친구는 영양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영양교사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임금을 받습니다. 87년 헌법은 친구의 삶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부터 새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시민지향적이어야 합니다. 1987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헌법도 2018년의 시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가 자칫 민생으로부터 떨어진 이전투구의 장이 되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장혜승 홍보팀 간사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극중 시종일관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평범한 대학생 연희(김태리)를 광장으로 이끌어낸 동력은 '아픔'이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이뤄낸 거대한 역사의 물결처럼, 새해에는 정치권에서도 시민들의 아픈 삶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개헌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

# 공수처 설치!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공수처설치 공법학자 / 국회의원 설문조사

정택수 정치사법팀 간사  
wild@ccej.or.kr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근절의 핵심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법무부도 자체 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11월 16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총 64명의 학자들이 답변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 공수처 설치 반대 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공수처장의 임기는 다음 중 어느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공수처 설치에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7.5%(56명)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5%(8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권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안 중 하나입니다. 공수처장의 적정 임기를 묻는 질문에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과반을 넘게 나왔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된 추천

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48.2%(2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에 대한 사건관할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44.6%(25명)로 나타났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는 답변이 46.4%(25명)였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7.5%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YMCA,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수처 설치추진공동행동’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과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11월 2일부터 약 한 달 간 설문조사에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었으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참여 국회의원 명단〉
강훈식 · 고용진 · 권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 심재권 · 어기구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희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7명), 김광수 · 박선숙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6명),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1명),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5명),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2명) 등 51명

현재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 총 86.2%가 찬성 답변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수처가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6명이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장 임명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39%(20명)가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 부여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 시 이첩해야 한다고 50.9%(26명)가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다소 갈렸는데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이 31%(16명) 가장 높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7.4%(14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국민여론은 80%를 넘나들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입법논의를 시작하여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공수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 1.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1	응답자수(명)	비율(%)
찬성	56	87.5
반대(반대 시 2-1번 답변)	8	12.5
기타	0	0
계	64	100

### 2.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2	응답자수(명)	비율(%)
1)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1인 내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단수 혹은 복수 추천권)	27	48.2
2)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가 협의하여 1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장 임명제청권)	12	21.4



Q 2	응답자수(명)	비율(%)
3)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국회의 인사검증권)	5	8.9
4) 대법원장이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국회의 동의권)	4	7.1
5)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야당의 지명권. 위 2번 항목에서 여당을 제외한 것)	4	7.1
6) 기타	4	7.1
계	56	100%

2-1. 공수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1	응답자수(명)	비율(%)
1)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검찰청의 특수수사조직 및 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의 옥상옥	6	75
2) 정권의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1	12.5
3) 헌법적 근거가 부재함	-	-
4) 검찰개혁의 효과가 없음	1	12.5
5) 기타	-	-
계	8	100%

3. 공수처장의 임기는 다음 중 어느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3	응답자수(명)	비율(%)
1) 임기 3년, 연임불가	32	57.1
2) 임기 5년, 연임불가	15	26.8
3) 기타	9	16.1
계	56	100%

4. 검찰과 공수처의 관할사건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4	응답자수(명)	비율(%)
1) 공직관련 범죄에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병행관할)	25	44.6
2) 공직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한다.(교차관할)	20	35.7
3) 기타	11	19.6
총	56	100%

5. 검찰과 경찰 등 타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와의 수사정보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5	응답자수(명)	비율(%)
1)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수사 착수한 즉시 그 요지를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병행관할, 통지의무)	20	35.7

Q 5	응답자수(명)	비율(%)
2)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수사 착수한 즉시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야 한다.(공수처의 우선관할 혹은 독점관할)	26	46.4
3) 수사정보공유는 수사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병행 혹은 우선관할을 전제한 합동수사, 공동수사, 혹은 공수처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	8	14.3
4) 기타	2	3.6
계	8	100%

## 별첨 2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1) 공수처에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찬성(44명)

고용진·권철승·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영진·김종민·김철민·남인순·박범계·박 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영교·설 훈·손혜원·신경민·신동근·심재권·오제세·원혜영·윤관석·윤호중·이상민·이석현·이원욱·이학영·정성호·정재호·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신용현·정동영·최경환·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윤종오 의원(민중당)

###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 ③ 무응답(3명)

신창현·조정식·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2) 공수처 처장을 선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철승·김경협·김종민·박주민·박홍근·설 훈·신경민·심재권·어기구·윤호중·이학영·정재호·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정동영·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이정미(정의당), 김종훈·윤종오 의원(민중당)

###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김영진·김철민·박범계·이상민·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최도자 의원(국민의당)

###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강훈식·남인순·박 정·백혜련·변재일·서영교·손혜원·신동근·오제세·원혜영·윤관석·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공수처와 검찰과의 관계(우선적 수사권, 이첩받을 권한 등) 설정에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 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법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4) 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 간의 인적 교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법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 주거복지로드맵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sub@ccej.or.kr

애초 9월 발표를 계획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각종이유로 수개월을 끌어온 주거복지로드맵이 지난 12월 발표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과거 정부들처럼 민간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제수용 토지는 민간에게 되팔고, 세입자 보호역시 민간임대사업자를 달래는 방식이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정권말 도입 계획한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혁안을 제시해

왔고, 공공주택 확충 관련해서도 택지매각 및 분양전환 금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확대 등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차례나 연기하면서 공을 들인 주거복지로드맵은 근본개혁보다는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추가지정 계획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심으로 땅값이 들쭉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이 로또주택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도 여전하다. 정부가 진심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 그린벨트 해제, 강제수용한 국민땅은 민간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어도 전체 주택의 50%까지는 민간매각이 허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의 절반 수준인 42만5천호는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과거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며 공공주택 확보를 소홀히 했고, 민간건설사는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갔다.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의 눈발임야를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정부와 민간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공택지에서만 93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포장해서 는 안된다.

역대 정부마다 수백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영구임대 19만호, 50년 임대 11만호, 국민임대 47만호 등 89호로 전체 주택의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된 임대주택이 270만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분양전환 됐거나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여전히 공급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보완했다고 하나, 8년 후 분양전환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전세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주택 역시공공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해도 서민주거비 인하로 이어질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로또주택과 바가지 분양을 방지해야한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에서는 로또 주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 아파트(보금자리)가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며 같은 우려가 재현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로또방지를 이유로 시세수준의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한다면 국민 땅을 강제수용한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제2 강남개발로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판교가 시세분양으로 주변 집값만 수십조원 상승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아파트 모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할 경우 임대기간은 40년에 재임대가 허용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은 건축비와 적정 토지임대료만 부담하면 평생 주거권이 보장된다. 무엇보다 값싸고 질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어 기존 집값 거품 제거도 가능하다.

수서 공공주택 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할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가는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평당5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1만원으로 주변시세(매매가 평당 2,900만원)의 반의반값 이하로 공급가능하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공공의 역할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집값 거품, 임대료 상승 등 과거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으로 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다면 전면적인 주택정책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 보편요금제, 보편적 통신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

통신은 평생 사용해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경제력에 따라 차별당하면 안 돼

권태환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dopj@ccej.or.kr

지금 우리의 삶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리적 이든 물리적이든 당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때문에 통신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더불어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 향유가 달라진다면 이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소비자의 보편적 통신권 실현을 위한 첫 걸음.**

통신비는 소비자 개개인이 평생 사용해야 하는 보편적인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신서비스 요금제는 소비자의 사용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 이익만을 고려하여 출시되고 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은 이제 누구나가 이용해야만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은 소비자의 기본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을 공평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편요금 등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은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의 통신은 단순히 전화하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의사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나아가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표현하고,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가 논의 중에 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



▲ 2018.1.3.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국민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 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제는 통신사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 꾸준한 실질화 노력 필요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dipsec@ccej.or.kr



▲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다.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언급된 지 반세기가 되어간다. 다양한 부침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되기 어려웠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던 계획은 또 다시 반대

에 부딪혀 2년이 유예 되었다. 이제 비로소 시행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처럼 종교인 과세 시행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질은 대폭 축소된 반쪽짜리 종교인 과세이다.



▲ 사진출처 : 한겨레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 이 문구는 사실상 그 실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실제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상당부분을 위 문구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삼모사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예외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비과세화를 의미하는 해당 조문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였지만, 정부는 비과세 소득범위 확대를 고수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당연히 종교인들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단체 세무조사 불가능 논외로 하더라도, 종교인 세무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배치되는 것이다. 종교인 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를 하려해도 세무관청이 먼저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대상자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점이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기타소득으로의 구분은 필요경비를 최대 80% 인정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 보다 소득구분으로도 특혜를 받는 것이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종교인과세 간이세액표를 담고 있다. 같은 조건의 근로소득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세금만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로 전환하여,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종교인 소득의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국가 과세권의 행사를 빌미로 종교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 의무를 새기고 있다. 이 두 가지 헌법적 가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세정의 실현은 종교인들이 솔선하여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명제이다. 그리고 조세당국은 이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종교인 과세제도는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다. 종교인 과세는 상식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실질적인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야 한다. ☹☹☹



# 벼랑 끝 농업, 켜켜이 쌓인 문제 털어내야 할 때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농업의 문제는 농민만 해당하는 문제인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당장 우리 밥상과 연결되어있다. 단순히 식량 공급의 가치뿐 아니라 자원환경의 보호, 국토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호까지 농업·농민·농촌에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우리 삶과도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농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뚜렷한 국정 철학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국내 농산물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농업정책은 늘 부족하기만 하다. 문제 발생에 앞서서 선제적 정책보단 사후처방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농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다. 촛불로 새롭게 수립된 문재인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국정과제에서도 농업의 문제를 위한 과제는 빠져있다.

농업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문제이기 보다는 오랫동안 지속해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추진했다면, 문제는 해결됐을 수도 있다.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이 명확한 농업문제인 만큼,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실련은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먹거리 안전 확보, 직불제 확대 개편 등 우리 농업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5가지를 선정했다. 경실련은 5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문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시리즈로 기획했다. 무엇보다 우리만의 외침에서 머물지 않도록 입법권과 행정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국회와 함께 연속으로 토론 중이다.

지난 9월 직불제 문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회 진행했다. 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정부가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하는 가격 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마야 박사는 직접 직불제가 실제 농가



▲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 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 및 경영안정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제도와 시행체계, 9개 유형 간 중복수혜 불가 등의 문제가 있기에 통합성 제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상 공익형이지만 내용 상 소득보전형이 혼재되어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했다. 또한, 토지 면적 중심의 지급으로 인한 농가 간 양극화 문제가 심화하였고 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또한, 현재 농업·농촌 문제의 원인은 예산이 작아서 생긴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자원 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예산규모 문제가 아닌 집행방식과 방향 설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가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원 프로그램 혹은 식량자급 직불제 혹은 식량안보 직불제」와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 서비스 대가인 가산형 「농업기여(사회적 서비스)직불제 혹은 다기능 농업 직불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 모두는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득 보존의 차원이 아닌 공익적 기능의



보상 개념, 공공재 서비스 대가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세분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을 더하는 자리였다.

두 번째 주제는 안전한 먹거리였다.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한 축인 유기인증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토론했다. 발제자인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유기농에 농약 검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살충제 계란과동에서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과 자연 방사한 닭이 낳은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을 분리했다. 토양오염으로 파생된 DDT가 검출된 농가는 오히려 피해자이며, 건강한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라면 모든 잘못을 생산자

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 제도로 농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 3가지를 제안했다. 농약 검출 등 결과 중심의 유기인증 시스템이 아닌 건강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증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다.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현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정의와 목적을 가진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와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아니라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 전문 인정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주요 공통된 주장은 건강한 농업 생태계가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고, 그걸 먹는 인간도 건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sup>1)</sup>의 재확립이었다. 헌법에도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발제자는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되는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소유 문제를 세부적으로 지적했다. 현행 농지임대차 관행은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하고 있는데 이 관행은 농지법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행적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으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기간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주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이었다. 우리나라는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곡물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목표치만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발제자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 식량 자급 하락의 이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식량 자급 중요성에 대해서는 식량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 자급기반을 포기하면서 폭동 등이 일어난 필리핀, 이집트, 영국 등의 역사적인 경험, 또한 선진국 대부분은 식량자급률이 높은 점을 설명하며 선진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식량 자급률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주요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꼽았다. 또한, 농가 수와 경지면적의



▲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소로 생산기반의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5가지를 제안했다. 헌법에 식량안보 가치 포함, 국내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산 농산물의 프리미엄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 등을 개발,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최적의 식량 공급구조 구축, 식량안보 기금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R&D 강화와 작부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자급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자급률 정책 평가와 세부 실행계획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마지막 남은 주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이다.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원하지 않는다. 즉 농산물 가격정책은 적정 가격 수준의 안정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양 주체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해왔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가격지지 수단은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에 한계가 있어, 일부 소득작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품목을 바꾸어가며 가격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에 따라 일부품목의 가격폭등 현상도 잦아지고 있다.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현재 농업경영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농가가 받는 값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 경제를 악화시킨다.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면서 안정된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한 4번의 토론회에서 공통된 주장은 농업을 단순히 산업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 보존과 보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는 농업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이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5가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농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농식품부는 이야기한다. 이 약속이 꼭 지켜져 새해에는 농민들이 자식 같은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과, 소비자는 안전을 의심하며 농산물 구매를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없길 바란다. ☺☺☺

# 흔들리는 망 중립성, 지켜야 할 원칙이다.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raid1427@ccej.or.kr

2016년 가구당 평균 통신비용은 14만 4,000원으로, 가계지출의 5.6%를 차지한다. 통신 3사의 매출액도 45조5천7백17억 원이며, 영업이익도 4조1백15억 원 이른다.

통신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통신은 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문화를 누리는 수단이며, 수도·전기·가스·도로와 같이 우리 경제를 받치는 밑바탕이다. 통신은 필수재이면서 공공성에 기반을 두지만, 통신서비스 제공은 SKT, KT, LG U+ 등 민간 대기업이 맡고 있다. 공공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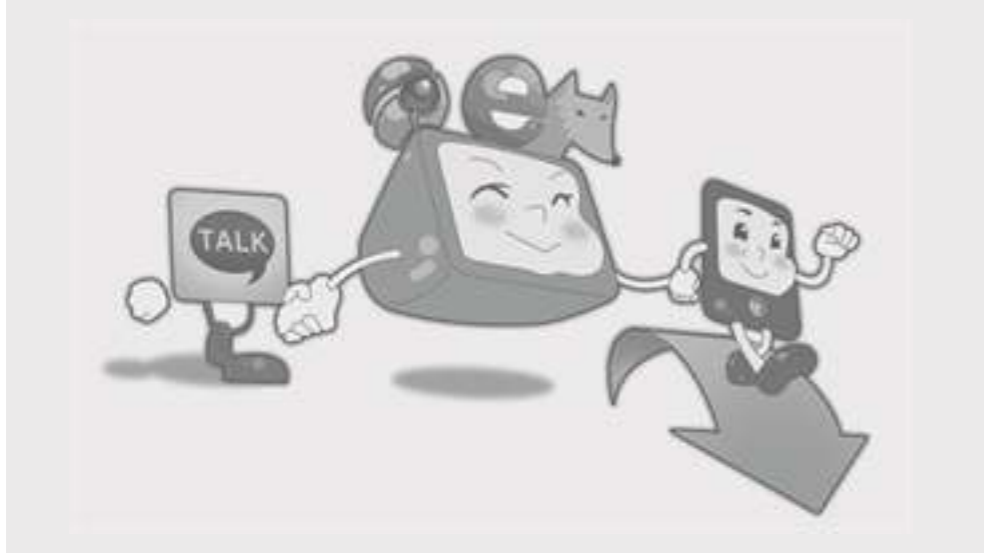
이익추구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통신 네트워크(망)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 인·허가, 요금규제, 망 중립성 원칙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지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SKT, 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제한, 2012년 KT가 스마트TV를 차단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사회





적 논란이 커졌다.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2015년 7월에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이 제정되어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 가능성까지 열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고,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망 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하거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되는 시도와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

망 중립성 훼손은 인터넷 끝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사회의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신사가 계속 염탐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독점적인 통신사에게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판단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사회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우리와 다른 법제를 가진 미국 FCC의 결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소비자 권리, 프라이버시권 보장, 신규서비스진입 보장을 통한 사회혁신, 민주원리의 보장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을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 상업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nari@ccej.or.kr

최근 서촌지역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건물을 새롭게 매입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기존 보증금 3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고,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비자발적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수익이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시책과 전략으로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됐으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규정된 상가임대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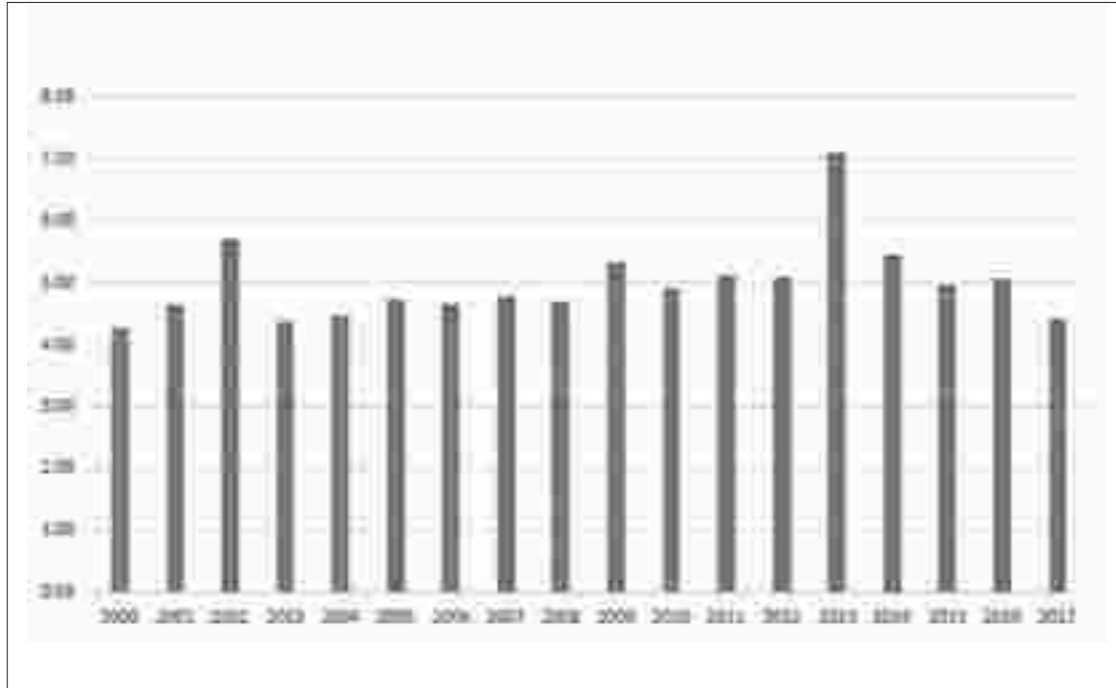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 조사결과 5.02년으로(아래표 참조)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 사례처럼 계약갱신기간이 완료되면 제한 없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으로

도시경관

2018년 1월호

평균 영업기간\_경실련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 재정리(2017)

〈그림 1〉 홍대 연도별 폐업업체 영업기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둘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연 9%에서 5%로 낮춰야 한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아래표 참조), 법정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

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다.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임대료 변화

지역	임대료 수준 (단위 만원, 33㎡)		연간 상승률	비고(최근 5년 내외)
	활성화 이전	활성화 이후		
홍대	83	122	49%	3년(2012년 VS 2015년)
서촌	45	135	150%	2년(2013년 VS 2015년)
연남동	59	119	40%	5년(2011년 VS 2017년)
가로수길	115	172	74%	2년(2013년 VS 2015년)
경리단길	112	181	40%	4년(2013년 VS 2017년)
한남동	76	190	50%	5년(2012년 VS 2017년)
해방촌	65	165	63%	4년(2012년 VS 2016년)
광주 1913송정역시장	45	85	94%	2년(2015년 VS 2017년)
대구 방천시장	30	130	145%	3년(2014년 VS 2017년)
평균			78.33%	

\* 부동산 114 자료 및 현지 공인중개업소 면접 조사 결과\_경실련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2017)

셋째,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철거·재건축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규정은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임대차 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의 도시재생 등 지역활성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경제나 산업 기능이 이전해 비어있는 단지가 쇠퇴한 도심에 개성 있는 건물로 개조해 젊은이나 예술가에게 분양하면, 지역환경이 개선되고 활기를 띠게 된다. 그러나 기존 상인이나 주민은 이들에 밀려서 비자발적으로 이주하고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만 살아남게 된다. 지역의 특성은 사라지며 다시 쇠퇴하게 된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사회적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부나 지자체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용도를 제한하거나 보호하는 방안이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법제도 개정논의는 답보상태다. 상가 임대차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 문제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공공의 개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상생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외국의 도시에 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

되고 있다. 해외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 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을 제한하여 소규모 독립상점을 보호하여 장소성을 지키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주민들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산을 만들고 그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되는 구조를 구축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요인을 제거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다.

프랑스의 파리는 '보호상업가로' 정책을 통해 특정용도를 보호하거나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공이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산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공급하고 지역협동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임대 관리하고 수익을 지역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일본은 쇠퇴한 소도시 도심 상점이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60년 장기임대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빌딩과 상점이 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했다. 해외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해 활성화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국내외 정책 사례들을 통해 국내 적용을 위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계획적 수단을 활용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관리운영한다.**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규제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지구로 지정해 젠트리피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의 특수한 장소성을 저해하는 일부 대형프랜차이즈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보호가 필요한 업종은 권장용도로 보호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상권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평가를 통해 대책을 수립한다.

**둘째, 지역자산공유형 재생방안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한다.**

지역 구성원(부동산 등)과 공공(기금 등), 그리고 비영리 민간기업(재생사업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공유되고 지역 내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자산관리가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이익이 지역에 재

투자되어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국공유지를 활용해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앵커시설을 건립하고 임대한다. 발생한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지난해 68개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숫자 중심의 사업지 늘리기보다 관련 대책과 제도 정비에 집중해야 할 때다. ☺☺



[자치분권 시리즈칼럼 13]

#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island7189@hanmail.net

30년의 공백기 이후 부활한 지방선거,  
그 후 27년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지방 자치단체장 관선제를 실시했다. 30년의 지방 자치 공백기를 지나 1991년 3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1995년 6월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27년이 지났다.

올해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부산시민은 6.13지방선거를 통해 부산 시장, 교육감, 구청장과 군수, 부산시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부산의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1995년 자유한국당 문정수, 1998년과 2002년 한나라당 안상영, 2004년(보궐), 2006년, 2010년 한나라당

허남식, 2014년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당선돼 줄곧 같은 당에서 부산시장이 나왔다.

역대 부산시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1998년 기장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구에서 1995년에는 자유한국당,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에는 한나라당, 2014년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비례대표 5석 중에서 3석도 같은 당에서 당선 됐다.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 구성을 기준으로 47명의 시의원 중에 시장과 다른 정당의 의원은 개원 당시 2명뿐이었으며, 이는 부산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변한 적이 없었다.

부산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부산 시의회의 구성이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로 구성됐으니,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구청장도 같은 정당 소속이 당선됐다. 지난 27년 간의 부산의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쟁이 없는 정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부산에서는 지방권력형 비리가 싹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그 결과 ‘엘시티’와 같은 대형 비리가 터지고 말았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만큼 부산의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부산시의회가 중요하다. 시의회가 부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산 시의 행정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없는 시의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의정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가 중요하다.

##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와 의미

부산경실련은 지난 2004년 부산시의회 의정 활동 평가를 실시한 이후, 2017년 말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활동 평가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다. 2013년에는 상설 조직인

〈표 1〉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총 점수

	2012년 (6대 2년차)	2013년 (6대 3년차)	2015년 (7대 1년차)	2016년 (7대 3년차)
총 점수(100점)	72.3점	70.4점	69.8점	69.3점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구성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의원에 대해 시상도 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의 이번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시의회 3년차 본회의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9점, 상임위원회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은 10.1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결과 본회의 9.9점, 상임위원회 10.5점에 비해 본회의는 동일하고, 상임위원회는 0.4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의 정성평가 결과는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에는 지난 평가에 비해 조례 발의 건수가 2.3배 증가하는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 발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조례가 많지 않았다. 타 지역 사례 베끼기와 법률 개정에 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수 늘리기가 여전했으며, 실현 가능

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 조례와 단순한 관련 규정을 정의하고 위원회 하나 만드는 식의 조례가 다수다.

부산경실련의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69.3점이다.

부산경실련이 진행한 부산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 총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안의 내용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며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2018년에는 제7대 부산시의회가 마무리되고, 6.13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2004년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부산경실련이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발언빈도, 조례발의수 등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안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계속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상설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통해 부산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성숙된 방청문화와 의정평가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 의회 방청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수시 평가하고,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가 마무리되는 2019년에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더 중요**

이런 지속적인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가 더 나은 부산시의회를 만들고, 더 나은 부산시

의회 활동이 결국 부산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과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부산시의회 구성이 어떤 한 정당에 의해서만 구성되면 경쟁 없는 의정 활동을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된 시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와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도 잘 알고 있다.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회 평가에서 시장과 다른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부산경실련

2018년 1월 23일

# 2017년 좋은기업, 좋은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 제26회 좋은기업상, 제3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이야기

이성윤 경제정책팀 간사  
pain2c@ccej.or.kr

지난 12월 7일, 경실련 강당에서는 제26회 좋은기업상과 제3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수상기업으로는 좋은기업상 대상에 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에는 KSS해운이 선정되었다. 좋은사회적기업상에는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에 세림조경디자인,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에 공감씨즈가 선정되었다.

지난해 26회를 맞이한 경실련 좋은기업상 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진행되는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왼쪽 : 유한양행, 오른쪽 : KSS해운)

〈표 1〉 제26회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평가결과

기업명	건전성 (25)	공정성 (20)	사회공헌 (15)	소비자보호 (15)	환경경영 (10)	직원만족 (15)	총계 (100)
(주)유한양행	19.64	16.85	8.17	9.95	5.35	10.19	70.16
(주)KSS해운	17.05	16.85	7.47	10.25	6.1	10.41	68.12

〈표 2〉 제3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평가결과

부문	기업명	공익적가치 (45)	윤리적가치 (35)	경제적가치 (20)	총점 (100)
	(주)유한양행	19.64	16.85	8.17	5.35
	(주)KSS해운	17.05	16.85	7.47	6.1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공시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총 387개의 기업과 367개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의 4개 기업이 수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평가대상 기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한양행은 이미 7회 좋은기업상 대상, 6회와 12회 좋은기업상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바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을 수상한 유한양행은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 고용안정 부문에 있어서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교육훈련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활발한 이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또한 자기자본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면서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KSS해운은 안정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성과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만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견기업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도 발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KSS해운은





▲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왼쪽 : 세림조경디자인, 오른쪽 : 공감씨즈)

22회에 이어 다시 한번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세림조경디자인은 지역의 노인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육원·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하여 경영의 안정을 높이고 있어 경제적 가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된 공감씨즈는 북한이탈주민 복합

교육문화공간이 함께 있는 공감게스트 하우스로 시작하여 현재 여행사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관광산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갖추고 있어 비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좋은기업상과 좋은사회적기업상을 통해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격려하고, 알리는 일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에 수상한 기업들도 수상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길 바란다.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고,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어 좋은 기업들이 더욱 더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

##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통일 이야기

조성훈 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지난 12월 4회에 걸쳐 29기 민족화해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알쓸신잡’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온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인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최근 조직 개편을 마치면서 정책위원 20명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남북관계/남북경협/외교·안보/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로 진용을 꾸렸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전과 다르게 주제별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양문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각 분야의 정책위원들이 참여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이야 남북 고위급회담도 성사되고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강의가 열린 12월 초만 해도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다이내믹한 남북관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남북관계가 늘 좋으면 통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이겠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정세가 변하고 요동치는 것도 통일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오면, 1강은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가장



▲ 경실련통일협회 이중수 이사장 이임식

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의 남영호 교수님,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윤은주 사무총장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님이 통일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분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남과북의 차이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4강은 경실련통일협회 최완규 대표님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서, 여전히 제재·압박 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셨습니다.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으며,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강의와 함께 경실련통일협회 이중수 이사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통일운동에 매진해 주신 것에 대한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한한 극동문제연구소에 김동엽 교수님,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님, 떠오르는 중국 전문가이신 세종연구소의 정재홍 박사님이 패널로 나서 주셨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앞으로의 정세 전망까지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히 김동엽 교수님은 더욱 자신감 있는 대북정책을 주문했으며, 송영훈 교수님은 치밀한 외교전략을 통한 주변국의 설득을, 정재홍 박사님은 사드 문제로 틀어진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방안으로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신경제지도까지 김일한 동국대 교수님이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해주시면서 쉽지는 않지만 진전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속히 교류·협력 확대와 남북경협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3강은 2강에 이어 같이 진행됐는데, 남북 간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민하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ccejco@hanmail.net



‘동계올림픽을 통해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구호 뒷전으로 밀려나 왔다. 이 때문에 개막식이 코앞에 다가온 이 순간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평창동계올림픽은 문화적, 환경적, 공간적, 경제적 새 지평을 여는 것으로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ICT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해 낼 수 있느냐가 성공개최를 판가름할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평화올림픽’

김정은이 1월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IOC와 국제사회는 즉각 지원과 지지를 보냈고, 실제 참가를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동시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교류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세계인에게 각인될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조되었던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대화의 마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문화올림픽’

전통문화와 세계문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번영이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미’를 소개할 전통문화관, 미디어아트와 근현대 미술 등을 담은 문화ICT관 등의 전시관 운영이나, 개폐회식에서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 아이돌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 콘텐츠를 얼마나 더 알려 내느냐와 같은 것만으로는 구현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막상 개최지인 강원지역 문화의 정수는 무엇인지, 세계인이 어떻게 접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말이다.

### ‘ICT올림픽’

기술적인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역량까지,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를 접목한 대회운영을 통해 참여자가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게 되리라는 것, 이후 관련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장이 되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환경올림픽’

전기버스 몇 대 운영한다고 ‘환경올림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500년 이상을 보호해온 가리왕산에 건설된 ‘무려 일회용’ 활강경기장을 이야기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원상복구’를 한다지만 이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얘기되는 복구계획은 엉터리, 그 자체이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적절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가리왕산에 활강경기장 건설을 강행한 이유는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일이다. 이즈음에서 허탈한 이야기 하나를 덧붙인다. 강원도는 ‘환경수도’를 표방해 왔다.

### ‘경제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분석에 따라서는 30조원에서 6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진정 이러한 경제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아니, 제발 있었으면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창과 강원도의 이름을 세계인의 머릿속에 각인시켰으니 이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 얘기한다. 그렇다. 지금 당장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를 떠올려 보자. 소치, 솔트레이크시티, 나가노 등등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만은 확실히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기억하는 것과 그것이 브랜드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분명 다르다.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면 세계인의 머릿속에 ‘어딘지 모르지만 각인된 지명’에 만족해야할지 모른다.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곧 개막한다. 1999년 강원도에서 개최된 동계아시안게임 직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천명한 이래 시작된 유치전, 우여곡절의 3수도전을 거쳐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sup>1)</sup>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성공개최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에 지역사회의 고민이 매우 크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유치과정에서나 이후 준비과정에서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왔지만,

1. 국제 신체 장애인 체육 대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확충되면서 강원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반이 마련되면 경제효과는 그냥 생기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확충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빨대효과’를 불러와 지역 상권에 타격을 가한다. 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는 지역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불러와 실수요자인 지역 주민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긍정적 효과만 내세우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활용 문제를 보자. 강원도

가 내놓은 수지분석결과만 봐도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3개의 경기장에서만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활용방안이 정해졌다는 나머지 경기장은 수익이 나는 것일까? 관리 주체가 강원도에서 도내 기초지자체로 바뀌었을 뿐, 뾰족한 활용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초지자체에 운영적자를 떠넘긴 것에 가깝다. 대회 자체의 적자와 이후 만성적인 경기장 운영 적자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강원도와 도내 기초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자체적인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가장 먼저 취약계층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안게임 이후 인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한 대회로 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을 잡아야 한다.

-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이나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일회용 개최식장과 같이 평창동계올림픽 곳곳에 드러온 최순실-박근혜 적폐의 그림자를 밝혀내야하고 500년 보호림 가리왕산을 훼손한 것과 같이 불합리한 의사결정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록으로 남겨 경계의 지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둘째, 강원도 차원에서는 경기장 활용 방안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시민과 함께 가꾸어 나아갈 방안까지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 ‘적자올림픽이 아니다’,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와 같은 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름이 차는 중기를 보면서도 임시방편으로 때우다가는 팔다리를 잘라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문제를 겹쳐서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한 대회로 기억되기를, 대회를 치러낸 강원도와 평창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여기에 지역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 속초시 난개발 이제 시민이 막는다

김경석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sokchoccej@hanmail.net



▲ 지난 1월 16일 속초난개발시민대책위는 출범식과 함께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개최했다.

속초는 지금 심각한 난개발에 직면해 있다. 인구 8만의 자연관광도시에서 최근 2년간(2016~2017)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건축물(아파트, 주상복합, 고층호텔)

이 34개나 된다. 또 물밑에서 토지매입 등 사업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6개나 된다. 그런데 공급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세컨하우스다. 지역민보다는 외지소비자를 위한 개발이고 모두

경관조망권을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30층대는 기본이며 47층 주상복합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형건축물이 난립하면서 공사현장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지표침하, 건물손괴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훼손, 식수부족, 교통정체,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1년만 더 진행된다면 속초는 더 이상 지킬 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난해 6월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지원을 받아 “속초시 난개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속초시민토론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속초 특색에 맞는 경관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별 높이제한 등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유재산(시유지)을 외지건설업체에 팔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실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900%에서 800%로 낮춰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올 하반기 2035도시계획재정비용역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용역은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믿을 수가 없다. 또한 “도시경관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여수시의 사례처럼 해당지역에 개발행위 제한을 해놓고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보다 강력한 시민행동을 하고자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월 16일 속초시청 정문에서 속초

시장을 규탄하는 출범식 기자회견을 하였다.

출범식 당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최봉문 교수의 진행으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을 진단하는 시민워크숍이 있었다. 주제발표를 한 임동일 강릉원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강원영동권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대형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 문제가 불거졌다”며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국내사례로 [2021청주도시기본계획재정비(2000년)]와 [수원시도시계획시민계획단구성(2012년)]을 꼽았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기초제안자로 나선 엄경선 청초호41층 반대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속초시난개발 방지 조례개정을 위한 타 지역사례 분석’ 발표에서 “서울시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로 속초시보다 낮고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도 건축제한(7층 이하·28m 이하)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제주도와 여수시는 시가지경관지구의 건물 높이를 3층 이하(12m)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여수시는 지난 2016년 여수 밤바다 경관확보를 위해 일부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속초시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900%로 서울시보다 높고,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높이제한도 없다고 했다.” 이에 “속초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15층,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층으로 제한해야 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또한 서울시와 같이 800%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시가지경관지역 또한 서울시와 같이 7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하루속히 속초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수영 전 설악신문 기자는 ‘건축조례로 본 대형건축물 난립 방지 사례’를 통해 “산·바다·호수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은 공공자산으로 특정집단에 의한 사유화가 아니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경관계획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15년 5월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도로변 건축물 높이 = 도로 폭×1.5) 폐지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 “속초시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처럼 구도심보호를 위해 조례로 도로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지 건설업체들이 도로 폭의 2배 이상으로 인허가 신청이 되고 있는데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1.8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제 속초시난개발시민대책위는 시민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을 수렴하여 용도지역(지구)별 대형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워크숍에서 진단하였듯이 서울시, 여수시, 제주도과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도로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주거시설제한, 시가지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을 조례로 정하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와 함께 시민워크숍을 2차례 이상 개최하고 또 시민서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월 말경 속초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으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산 바다 호수를 가로막는 무분별한 대형건축물의 난립을 막고 속초 특색에 맞는 경관형성과 천혜의 자연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지켜냈으면 한다. ☺☺



# ‘2017년 신입회원의 밤’이 성황리에 열렸어요!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지난 12월 6일 저녁 경실련 강당에서는 신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2017년 경실련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신입회원들과 상근자들이 맥주파티를 벌였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18명의 회원들이 모두 모여주셨어요.



2017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들어오면서 경실련 로고가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 한컷씩 찍고 입장



내 이름은 어딴? 각자 명찰을 찾고, 오늘 하루 파트너가 되어 줄 상근자 명찰도 같이 뽐습니다. 두근두근



ööö

경실련 강당의  
놀라운 변신!

홍보팀이  
마법의 손으로  
기자회견과 토론회만  
하던 강당을  
이렇게 파티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테이블별로  
오손도손  
대화 나누며  
맥주와 식사,  
다과를 드시는  
모습입니다.



ööö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2부 순서로 들어갑니다.  
먼저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ööö 회원님들 한분 한분 정말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내친김에 건배사까지~! 좋~대!



○○○ 다음 순서는 경실련도 알아가고, 퀴즈 맞추고 선물도 받는 퀴즈쇼!!!



○○○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말정산 꿀팁!  
알기쉬운 연말정산 강의를 박훈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 13월의 월급에 모두 귀가 쫑긋~



○○○ 재미있는 퀴즈, 황당한 퀴즈에 모두 웃음이 터집니다.





○○○ 준비한 순서들이 끝나고 윤순철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씀과 마지막 건배사~! 경실련 나가자!!



○○○ 마지막으로 2017년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보면서 신입회원의밤 행사를 마쳤습니다.

## [인터뷰]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기업 공감씨즈 인터뷰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경실련은 재벌과 기업을 날카롭게 감시하는 활동도 하지만,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발굴해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좋은기업, 좋은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회원들에게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사회적기업이 있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된 공감씨즈입니다. '여행, 북한,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이 기업은 대구

에서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로 시작해 NGO에서 게스트하우스로 확장하며 사회적기업이 되었습니다.

여행사로 영역을 확장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계획을 갖추고 있어 현재보다는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허영철 부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Q. 대구에서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여 시작하게 되셨나요?

A. 그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002년 당시 제가 몸담았던 기관은 자원봉사운동 NGO로, 홈리스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설

대구쪽방상담소를 복지부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하반기에, 우연히 대구지역에 북한에서 오신 우리 동포들이 100여 명이나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들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들을 위한 지역의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엔 북한이



▲ 공감게스트하우스 본점 건물 전경



▲ 공감호스텔(공감동성로게스트하우스) 건물 전경



▲ 공감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치한 '카페공감'

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체계가 지금보다 많이 미비했던 상황이라,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이 시급했습니다. 이후 2003년에 '북한이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식적으로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 여러 사업 중에 숙박업을 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A.** 저희는 원래 당시 회자되기 시작했던 공정여행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백두산이라든지 북중국경지역 연수도 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대구

지역 시민들과 금강산 여행도 가보는 그런 여행을 꿈꾸었습니다. 이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요. 그 컨설팅과 내부토론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설립하여 사업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여행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대구지역에도 게스트하우스처럼 건강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불러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구지역 청년, 탈북 청년, 외국 청년, 전국에서 대구를 찾은 청년이 함께 '공감게스트

하우스'란 공간에서 만나 얘기하는 것을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Q. 일반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A.** 사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련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증빙서류와 행정절차가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기보다 독자적으로 살아 남아보자라는 의지가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보니, 이 업종이 생각보다 훨씬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예약전화 응대, 해외 예약사이트 관리, 객실청소, 손님응대, 지역 관광 안내자로서의 역할까지. 임금을 지원해주는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했고, 결국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 고객 입장에서 세계적인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와 비교해서 공감씨즈만의 차별성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공감게스트하우스 객실(8인실) 내부

A. 에어비앤비는 사실 저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지요. 에어비앤비의 기본개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안에 남는 방을 공유공간으로 싸게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실제로 한국에서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게스트하우스(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저희 공감게스트하우스는 6인실, 8인실,

10인실과 같은 도미토리 공간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숙박하며 만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그룹이 집주인의 객실을 자기 집처럼 빌려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같은 게스트하우스는, 보다 다양한 곳에서 온 여행자들끼리 서로의 삶을 얘기하고 친구가 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Q. 북에서 탈출해 남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자’ 등 여러 가지

표현 중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희 기관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이주민’이라고 사용해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단체는 북에서 온 동포들이 통일이 되면 다시 고향에 가서 살수도 있고, 또 이곳에 북한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살 수도 있다는 관점을 주요하게 생각해서 북한이주민이라고 사용해왔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명칭과 용어와 관련해서 워낙 곡해와 다툼이 많은 관계로 법적인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Q. 북한이탈주민들을 ‘앞서 찾아온 통일’이라는 마음으로 이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시는데, 통일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A. 저희 사회적기업 공감씨즈는 지난 5년간 한반도와 북한이탈주민들을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반도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자원봉사자카데미에 북한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듣기도 했고요, 북한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제, 북한음식 함께 만들어 먹는 행사 등, 문화적 차원에서 북한을 알아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대구란 지역에서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작은 역할들을 늘 고민하고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리

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개선된다면 북한의 금강산, 백두산을 상품으로 하는 여행사가 되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더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수익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비롯한 사회 공익 사업에 20% 이상 지원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에 쓰이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A. 2016년 결산결과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저희는 정관에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용처를 명시해놓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순이익의 50%는 사업확장을 위한 재투자 및 자부담 급여적립에, 20%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부나 사업에, 20%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직원복지 및 후생 관리에, 10%는 소외계층과 사회공헌을 위한 기부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아직 정부지원을 받고 있고 대출금도 있는 재정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원칙을 정확히 실현해 나가기 위해 통일부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역량강화에 써주시라고, 당기순이익의 20%인 512만원을 공식 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은 처음 설립 때의 초심을 유지하며 정관에 의거한 대로 사회공헌활동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공감호스텔(공감동성로게스트하우스) 내부 사진

**Q. 그동안 만나온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한 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계속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에피소드나 인상깊은 사건들 있으면 들려주세요.**

**A.** 저희 기업은 북한 출신 청년뿐 아니라 남한의 청년도 함께 일하는 기업입니다. 오랜 세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해오면서, 해외의 난민정착사례와 이주자들의 정착현황을 알아보고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사회통합형 프로그램이란 것

입니다. 우리사회는 너무 많이 구분 짓는데 익숙합니다. 다문화,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등,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는 결국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낙인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기업은 출발부터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적응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함께해 왔습니다. 지금은 1명의 북한 출신 청년이 일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거쳐 간 북한출신 청년은 10여명에 달합니다.



▲ 공감호스텔(공감동성로게스트하우스)에서 내외국인 손님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업종의 특성상 다른 직장보다 훨씬 더 사회와 인간관계를 배우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공감에서 일했던 탈북 청년들은 이곳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를 얻어 해외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거나, 수도권에 취업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기업은 이 친구들이 더 성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그 전까지는 이들의 디딤돌 직장으로서는 기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실은 이들의 삶이 너무 전쟁터이기에 특별한 에피소드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남한에 와서 의대에 진학하고 인턴과 전문의 수련을 잘 거쳐, 당당히 의사가 된 친구입니다. 의사가 된 후에 저희를 찾아와서, “저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후원카드 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웬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처럼 남한에 와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배 탈북자들을 열심히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친구가 적은 후원문구를 보았을 때, 이 일의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Q. 대구의 명소를 소개해주신다면?**

A. 몇 달 전 KBS <배틀트립> 프로그램에서 구구단 김세정씨가 저희 공감게스트하우스를 베이스캠프로 대구여행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대구는 아주 핫한 먹방투어지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여전히 “대구에 볼게 뭐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대구 구도심에 조성된 근대골목투어는 연간 2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지이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도심재생의 선진지로 찾아올 정도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대골목투어 외에도 누구나 한번은 오고 싶어 하는 김광석 거리, 조선시대부터 평양시장, 강경시장과 더불어 조선3대 시장으로 불리던 명성을 느낄 수 있는 서문시장, 서울 명동보다 넓고 홍대클럽거리에 이어 2번째라고 불리는 클럽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의 도심 동성로는 대구가 자랑할 만한 관광지입니다. 근대골목투어, 김광석거리, 서문시장, 동성로 이상 대구관광 탐4는 독자 여러분들이 대구에 오시면 꼭 들려보셔야 할 곳입니다. 게다가 이 네 곳과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Q. 경실련에서 이번에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사업적기업을 이미 일구어가시는 분들, 또 새롭게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A. 초기설립과정의 어려움을 딛고 정착해나가는 과정에서 수상하게 된 이번 경실련의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저희 기업과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경실련에 큰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사회적기업은 도전입니다.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으며, 아프지 않고 하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어느 외국 신부님의 말씀을 떠올려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사회로 나아가는 길, 저희는 바로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함께 도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KBS 배틀트립 촬영 차 공감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구구단 세정, 나영과 공감씨즈 직원들

인터뷰 읽어보시니 왜 더 소개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통일이 되겠어?'라는 체념이 가득한 시대에...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꿈꾸며 묵묵히 희망을 꽃피워가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머지 않은 시기에 대구에 놀러 가 추천해주신 명소들도 둘러보고 공감게스트하우스도 꼭

이용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여행사의 금강산 여행상품도 빨리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씨즈가 2000년 초반 품은 꿈이 지금의 공감씨즈를 이뤄냈습니다. 이 소중한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이 나누고 더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어지기를 경실련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 [인터뷰] 동지내몰림 시리즈 1편 공중족발 인터뷰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늘어난 만큼, 쫓겨난 이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입니다. 동네는 텅지만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서촌이 뜨자 서촌에서 공중족발을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지만, 세입자였습니다. 건물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97만 원이던 가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족발 팔아서 얼마나 큰돈을 번다고, 보증금도 아니고 어떻게 월세만 1,200만 원을

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실련도 제작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돼버린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잘 담아 알고 싶어 동지내몰림 시리즈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첫 인터뷰는 최근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서촌 공중족발 김우식 사장님과 윤경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진짜 약삭빠른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가게 오픈해갖고 3~4년 하다가 팔고 나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독립문이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다 여기 있고, 다른 동네 떠날 생각을 아예 못 한 거예요.

Q. 어떻게 서촌공중족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서촌에서 분식점 2년하고 7년동안 실내포장 마차 해서 번 돈에다 대출금 받아서 공중족발을 차렸어요. 빚 좀 갚아나가며 장사가 좀 되겠다 싶었는데 건물주가 바뀐 거죠.



▲ 현재 공중족발 입구는 트럭과 철문으로 막혀 있고, 2차 집행이 있었던 지난 11월 9일 이후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동산에서 나와서 부추겼어요. 팔 생각 없냐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서촌이라는 이름이 뜰 때부터요. 사장님네 가게 정도면 권리금 1억 5천에서 8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파시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동네가 고향이고 여기 떠나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건물주가 바뀌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Q. 강제집행은 언제 시작됐고, 최근 3차 집행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A. 10월 10일에 1차 집행이 있었어요. 법원, 사설용역 포함해서 100명 넘게 왔고, 저희는 60명 정도로 막아냈어요. 새벽 6시 반부터 4시간 대치해서 '집행불능'하고 갔어요. 2차 집행은 11월 9일에 야간집행이란 걸 신청하고 왔어요. 야간집행은 법원에서 판사가 허가를 내려야 되는 거고, 소수 인력으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래요. 20명 내외로 왔는데, 돈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요.



▲ 작년 11월 9일 왼쪽 손가락이 네 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접합수술 후 회복중이신 김우식 사장님과 윤경자 사모님(왼쪽부터).

3차 집행을 또 해서 1월 15일 들어왔고 막아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행관이 집행 불능이 아니라 집행중지를 내렸어요. 둘의 차이가 큰데, 불능은 집행신청 다시 하려면 건물주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또 돈이 들어가요. 근데 중지는 그게 아니라 중지된 상태, 말 그대로 휴전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집행관이 처음에는 불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집행관을 불러서 뭐라고 하니까 집행관이 다시 와서 중지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항의하니까 바꾸더라고요.

**Q. 손가락 다치셨을 때의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A. 2차 집행 때 사설용역이 사복차림에 손님처럼 가디건에 후드티 입고 모자쓰고 와서 여자들부터 끄집어 냈어요. 족발 꺼내려고 주방에 있는 남편도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남자다보니 저항하는 게 틀리잖아요. 3~4명 사설용역이 붙잡고 빼는데 윗도리까지 다 벗겨지고 했는데도 죽을 힘 다해 싸우니까 힘을 못 당하니까 건물주가 용역대장, 제일 힘센 사람을 1명 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 낚아채니까 그냥 팔려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리대 밑에 흠을 잡고 버티다가 새끼 손가락이 제일 심하게 다친 거였고, 네 개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죠. 다행히 접합은 잘 됐지만 정말 끔찍했어요.

**Q. 최근 JTBC 뉴스룸에서 궁중족발 집행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집행관의 역할은 집행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가 동원한 사설용역은 인원수만 채우는 사람들이예요. 물건은 만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일반화돼서 내려오다보니 합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경비법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어서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2차 집행중에 손가락 다쳤을 때도 집행관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인사사고가 나면 집행관이 정지시켜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고 방관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원 집행처에 진정서를 넣었어요. JTBC 뉴스룸에서 취재 나온 게 '집행관 위반'으로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노무자 관리 감독

을 제대로 안 해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네요.

**Q. 건물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A. 북유럽 수입가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투기성 임대업으로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비어있는 건물을 통째로 매매하는데, 세입자들이 가져가야 할 권리금 부분이 없어져서 시세차익에 플러스가 돼서 그런 걸 잘 하신다고 해요.

그 분은 집행할 때도 직접 나오세요. 집행 나오기 전에도 가게 앞 현수막이나 신문 기사 스크랩해놓은 거 다 와서 뜯어버리고, 문자로 “너는 범법자다” 다쳤을 때도 “쇼한 거지?” “너 진짜 죽으려고 했었냐? 죽지 그랬냐?”고 했어요. 사람 괴롭히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건물에 다른 가게들도 있었는데 소송까지 간 건 저희뿐이에요.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남편이 손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저랑 사람들 있는거 뻔히 알면서 2주 동안 가스 2번 끊고, 전기 개량기 아예 통째로 떼어가고 수도 잠그고 화장실 폐쇄까지 시켰어요. 사업자등록증 말소시키고 통장 압류까지 다 해놨어요. 그걸 2주 동안에 다 했어요. 수도하고 전기는 생존권이잖아요. 사업자등록증도 본인 아니면 말소를 못시키는 건데... 저희가 관공서 쫓아다니면서 다시 회복시키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11월 9일 이후 한달 내내 매일 울었다고 하시는 윤경자 사모님.

저희가 다시 관공서 사람들 실사나오게 해서 복구시켰어요. 화장실은 앞에 사장님들이 두 군데나 키를 주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통장 압류한 것만 아직 못 풀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주택청약통장까지 다 압류당했어요.

10월 말에 투병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월 30일날 돌아가셨는데, 탈상하

고 1주일 만에 2차 집행을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손을 많이 다친거죠.

SNS 하는 젊은 분들이 한달에 1,200만 원 월세가 말이 되냐고? 막 댓글달고 비난하니 이 분이 명언을 남겼죠. “족발가격은 족발집 사장이 정하는 거고, 임대가격은 임대인이 정하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Q. 이런 일들 겪으시며 심정이 어떠셨어요?**

**A.** 아무리 자본주의라지만, 건물주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올리는데 뭐 상관이나 이러지만 이걸 정말 너무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더군다나 음식하는 사람이 손을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 손이 불구가 될 정도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었어요. 회복이 빨라 정말 다행이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하는데, 11월 한달 동안은 내내 매일 울었어요. 경찰서도 한번 안 가봤는데 생전 처음 관공서도 다 다니고 법원이며 경찰서며 혼자 다녔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직장 다니고 군대 가있고 해요. 큰애가 아빠 병원에 있는 동안 병간호했는데, 다친 날 아빠 다친 걸 직접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시세차익으로 돈 버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지만 자기가 돈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Q.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A.** 저희가 3차까지 집행 막아내고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는 저희처럼 다 장사하는 분들이세요. 저희처럼 이런 일 겪고 분쟁에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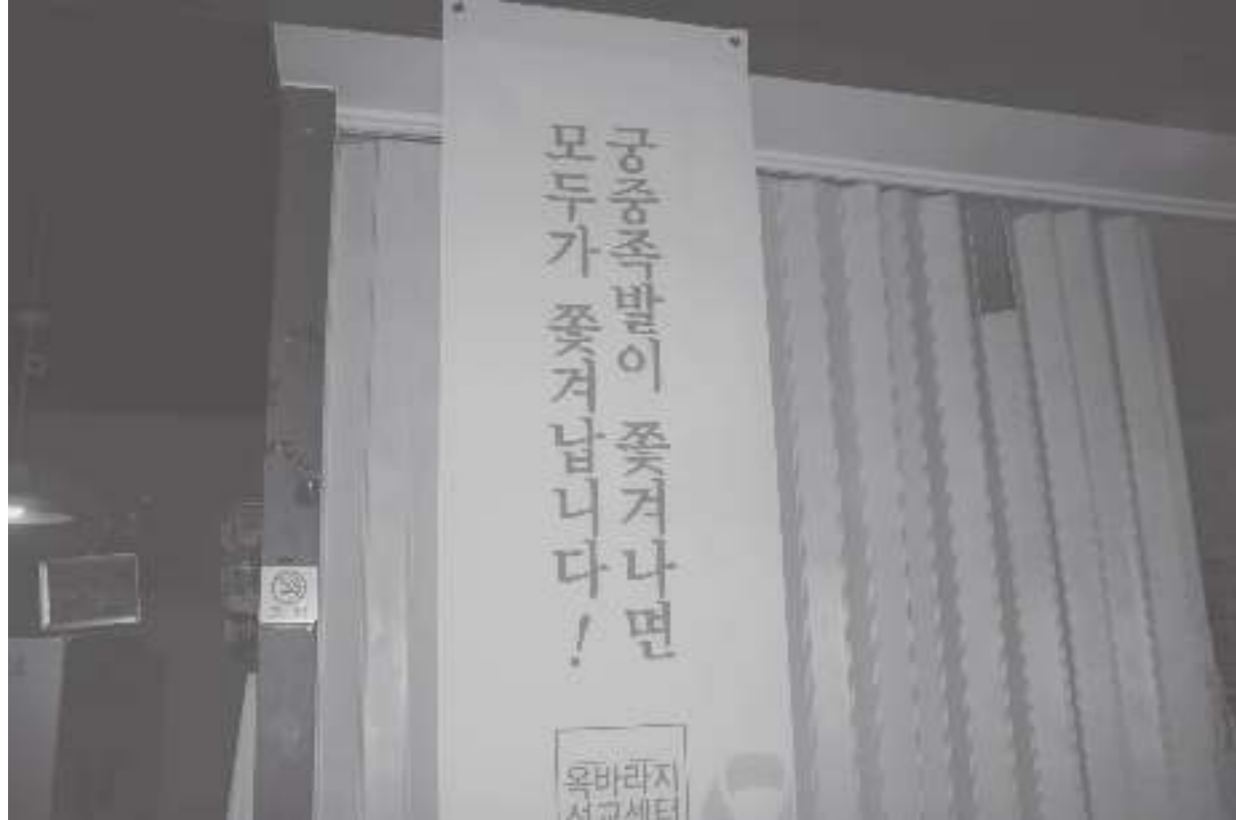
봐서 다시 장사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 아예 접고 회사다니는 분도 있고, 아직 분쟁은 안 일어났지만 이제 다음 다음 차례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맘상모가 법률자문부터 수요집회 등 저희와 항상 같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그밖에도 기사랑 보도가 많이 되고, 뉴스, 인터넷 페이스북에도 많이 알려져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3차 집행 때는 새벽부터 모였거든요. 9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새벽 6시부터 모였는데, 제가 처음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가게 처음 오는 젊은 학생들이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왔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보고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온 건 처음이에요. 많이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많이 못왔어요. 오늘 와봤으니까 다음에 또 올게요”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도 건물주가 와서 행패부리고 하는 거 다 봤거든요.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한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돼요.

저희 가게 단골손님도 문이 항상 닫혀있으니까 지나만 갔었대요. “사장님 힘드시죠? 여기 지나만 갔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어서 사장님 못 봤어요. 저도 이 동네 살고 있지만 서촌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된 건데,





▲ 궁중족발집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동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사장님의 싸움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됐으니까 사장님네가 쫓겨나면 여기 임대료 다 오르는 거예요. 사장님 꼭 이기셔야 돼요”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에서 쿠키를 손수 구워가지고 그 앞에 메모를 붙여가지고 앞집에 쇼핑백을 맡겼어요. 자기네 온 가족이 우리네 족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이기시라고...

그런거 보면서 참 세상이 진짜 나 혼자라고 느꼈는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실감나게 느꼈어요. 처음엔 죽을 거 같았거든요.

**Q. 영업을 못하셔서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A.** 장사도 못하는데다가 계속 나가는 건 생가니까 어렵죠. 여기 지켜주시는 분들 생활하고, 한번 오면 스무 명에서 서른 명씩 오시니까 그 사람들 먹거리며 돈이 계속 들죠.

그래도 돈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연대를 해주시고, 김장철에는 자기네 김치 담그시면서 한통씩 갖다주기도 하셨어요. 인터넷에 후원계좌 열어가지고 십시일반 모이는 게 그게 꽤 큰 돈이 되더라고요. 큰 돈 송금하는 게 아니라 1인당 5천원, 1만원 모아지면 그래도 꾸려는 나가겠더라고요.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이제 법정싸움하고 경찰서 조사만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는 진 건데요, 아직 손해배상청구 건도 남아있고,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강제집행은 중지된 상태라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번엔 법원인력 20명 내외로 적게 왔었는데, 이번엔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보통 건물주가 3차 4차까지는 집행을 안 하거든요. 무리라고 생각해서 안 한 대요. 4차까지 하면 그때서야 안 되겠구나 포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24시간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고, 매일 요일별로 행사를 해줘요. 제일 고마웠던 게 옥바라지선교센터는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나머지 음악가들은 다른 음악가들 추천해서

공연, 시낭독회, 영화상영도 해줘요. 다양하게 문화제를 많이 해주시는 게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기운 북돋아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안쪽에 테이블 4개 놓고 손님 받던 방은 이제 가게 지키는 사람들이 잠자는 곳, 공연할 때는 무대가 돼요. 가수 분들이 이 무대를 되게 좋아하세요. 신발 벗고 양말 신고 공연해보긴 처음인데 웬만한 공연장 못지 않고 좋다고 해요.

홍대입구에 있던 두리반 사례처럼 저희도 빨리 해결돼서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인터뷰 갔는데 가자마자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희에게 떡볶이를 한 대접 주셨어요. 분식집 하신 경험 때문인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업도 못하시고 투쟁장으로 변해버린 가게를 보며 안타까웠지만 지지해주고 함께 지켜주는 이들과 함께 곳곳이 싸우시는 두 분에게서 오히려 힘을 얻고 왔습니다.*

소액이라도 후원해주시면 십시일반 모여 큰 힘이 된다고 하시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세요. ☺☺

# 아이 엠 히스 레저, 27클럽, 그리고 종현

- 우리 곁의 종현을 추모하며 -

장혜승 홍보팀 간사  
duchess@ccej.or.kr



▲ 종현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 위로와 공감의 언어를 가진 사람, 종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오랫동안 위안을 주던 그의 죽음을 소비하고야 말았던 그 순간을.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와중에도 떨리는 손가락은 위독, 죽음 등 생사를 오가며 1분마다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클릭하기에 바빴다.

종현.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예술가이자 섬세한 위로를 전할 줄 알던 이.

마침내 그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이후에야 종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다. 살아

생전 팬임을 자처했으면서도 우습게도 종현이 죽고 나서야 그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종현은, 내가 알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고 알던 것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지친 사람들을 볼 때면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Lonely-종현) 사려 깊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가 내미는 손길은 항상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을 향해 있었다.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활발하게 게시되던 2013년에는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대자보 사진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대자보를 쓴 성소수자 학생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똑바로 외치는’ 이들을 응원하는데 기꺼이 힘을 보탤 줄도 알았다.

세월호 희생 학생 중 자신과 생일이 똑같은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팬들에게 안산 합동분향소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던 종현은, 다른 이의 고통을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남의 아픔에 기꺼이 손을 먼저 내밀면서도 정작 본인의 아픔을 드러내는 데에는 인색했다. 종현이야말로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왜 그래야 하는지 수백 번 물어봐도 날 위해서는 아니다. 널 위해서다. 널 위로하고 싶었다.”

공개된 유서 속 종현은 상처로 가득했다. 이겨낼 수 있는 건 흥터로 남지 않는다면 그의 말처럼, 그의 유서는 온통 그가 세상과 부딪히면서 생겨난 생채기투성이였다. 뛰어난 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일 뿐만 아니라 ‘반전은 없고 여전한만 가득한 하루의 힘듦을’ 위로할 줄 알던 라디오 DJ 종현은 결국 세상에 부딪히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 채 스러져 버렸다.



▲ 히스 레저. 출처: 네이버 영화

## 27 클럽의 예술가들과 종현

종현의 유서를 읽으면서 종현이 죽기 두 달 전 봤던 영화 ‘아이 엠 히스 레저’가 떠올랐던 건 그래서였다. 그저 다크나이트의 광기어린 조커로만 기억되던 히스 레저는, 자신이 직접 카메라로 찍은 영상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회고 속 히스 레저는 그가 연기했던 아이밧데어의 7가지 밤 딜런의 자아들처럼 각양각색으로 눈부시게 빛났다. 좋은 친구, 재능 넘치는 배우, 슈퍼스타, 사진작가, 뮤직비디오

감독, 예술가 그리고 좋은 아들의 모습. 평소 시간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인 까닭일까. 27살에 죽은 예술가들처럼 되고 싶었다는 그의 바람대로 그는 27살에 죽었다.

종현과 달리 히스 레저의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자살이 아니냐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영화는 오히려 삶에 대한 에너지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종현과 히스 레저는 서로 닮아 있다. 두 사람 모두 방식만 다를 뿐 각자의 삶을 치열하고 온전하게 살아냈고, 그들 삶의 궤적들은 예술이라는 형태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다.

향년 27세. 히스 레저도 종현도, 27세에 죽음을 맞이한 예술가들을 일컫는 ‘27 클럽’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뎌야 자그마한 행복 하나가 나타나고 힘든 오늘을 견딜 만큼 내일이란 게 가치 있나 싶을 27년을 겨우겨우 버텨낸 것처럼, 그들도 언제까지나 같은 시대를 살아갔으면 했다.

종현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 더 허리를 곧추세우고 삶을 마주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청춘이 서글프게 저버렸기 때문이리라. 남을 위로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프게 끝나 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이루지 못한 ‘지겨운 통증을 환희로 바꿔 내야’ 하기 때문에. ☹️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 언론의 눈으로 재벌의 민낯을 파헤치다

재벌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한다! 2017년 연말에 진행한 경실련 '경제민주화 강좌'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본 강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특히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뜨거운 강의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언론의 눈으로 재벌의 민낯을 파헤치는 시간. 강의는 경실련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경실련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지난 1월 11일,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까지로 제한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안에 경실련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가 영업이 잘 된다 싶으면 치솟는 임대료로 쫓겨나는 영세상인들. 이러한 동지 내몰림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줄기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 ■ 사법농단, 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보다 심각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적극 개입하려 했고, 심지어 재판 결과를 상고 법원 설치 정책과 거래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법관 사찰', 그리고 '재판 개입' 의혹에 수많은 분들이 원통함을 느끼셨습니다. 사법권 훼손,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경실련은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이재혁 | 많이 배우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손상석 | 경실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신태현 | 근속하는 회사의 식품안전팀 소속이며, 식약처 식품안전사고 관련 식품안전 이슈 유통업으로 인한 소비자 권 소비자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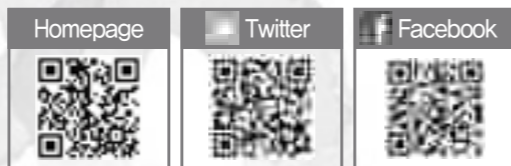
정의호 | 사회정의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실련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justice

전화번호 02-766-5627~5628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7. 12

- 12.01 •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12.04 • 국민 건강위해 안전한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하라!
- 12.05 •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발표  
•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8]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  
• 건설 일자리 개선위해 불법취업 외국인력 근절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하라
- 12.06 • 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12.07 •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영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 12.08 • 공수처 설치 촉구 릴레이 1인시위(11월 27일~12월 8일)  
•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 12.11 • 제26회 좋은기업상 및 제3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활동백서 발간
- 12.12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9] 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종교계·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 청구
- 12.13 •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불법 외국인노동자, 불법 재하도급' 판치는 건설현장 개혁 없이는 임금직불제 실효성 없다.





- 12.14 •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 12.15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평가를 위한 좌담회  
• 동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법제화 토론회
- 12.18 • 주민 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대효과 없다
- 12.19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0]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지방분권개헌  
•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토론회
- 12.20 • 국민이 원하는 후분양제 전면 실시,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 12.21 • 공정위는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을 외면하지 말라  
• 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종교인 소득 전반의 비과세화 우려가 크다
- 12.22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편법으로 빚어진 구조적 인재다  
•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경자유전의 원칙
- 12.28 •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8. 01

- 01.02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1] 지역주민 최후의 통제장치, 주민소환제도
- 01.03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01.04 • UN경제사회이사회 제출 4개년 활동 보고서(2007~2014)



- 01.09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2] 주민투표 · 주민소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01.10 • 남북 고위급회담의 진전된 합의를 환영한다  
• 집권 2년차 개혁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의지 안 보여
- 01.11 • 상가 임대료 인상을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01.12 •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01.15 • 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01.16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3]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 헌법 개정 -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 · 노동 · 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 01.17 •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
- 01.18 •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 01.19 • 문재인 대통령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4%
- 01.21 • 도시재생사업, 토목 · 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01.23 •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라!
- 01.24 • [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4]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4] 식량자급률 제고  
• [국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국회 의견 청원  
• [의견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 01.25 •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 01.29 • 참사 키운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 152명, 가입일 : 2017년 11월 21일~2018년 1월 26일)

강창환	김미정	김점수	대구도시공사	박연순	변성수	신동기	유병갑	이수직	이한국	정의호	최재석
계룡건설산업(주)	김민정	김종학	도원사랑	박경덕	서두원	신영남산업주식회사	윤석신	이영권	이헌길	정인식	하승창
곽기용	김성달	김지윤	도진옥	박용수	선유하	신원훈	윤종임	이영범	이혜지	정인식	한국비철(주)
구성호	김승우	김진일	류경희	박용하	소삼영	신태현	이경애	이영수	이혜진	정찬규	허무열
권대용	김승주	김진주	박광태	박윤숙	손상석	심양희	이계환	이원구	임재환	정해용	허부영
김건식	김영남	김창재	박미정	박인기	손원기	심재국	이나리	이재문	임주억	조경록	홍사준
김경미	김영채	김철민	박미정	박정희	손효진	안석모	이동기	이재필	임현철	조성훈	홍성연
김경원	김영현	김향남	박병석	박종영	송동호	안창현	이명화	이재혁	장권	조영철	홍승용
김귀호	김영희	김형탁	박서윤	박필수	송애영	양끝선	이범선	이재혁	장재호	조현경	홍승활
김남훈	김옥희	남양숙	박선홍	박형수	송연미	양현인	이상봉	이종만	장조영	주식회사 남한이앤지	
김동욱	김요한	노경옥	박성국	박형철	송재구	엄기운	이상애	이중수	전명진	지석	
김문수	김재경	노병일	박성대	박혜수	송해선	오재만	이선희	이주일	전진식	최병정	
김미경(2)	김재성	노승복	박승해	박홍래	신도선	옥춘금	이성민	이준영	정윤남	최장은	

<b>중앙경실련</b>	강지영	공정표	권순남	김경모	김기태	김명기	김병학	김성래	김시연	김용석	김윤식	
(사)녹색교통운동	강창걸	공진하	권순범	김경배	김기환	김명임	김병호	김성민	김시원	김용섭	김용	
(사)녹색자연농업	강창구	곽기훈	권순식	김경생	김길락	김명철	김보경	김성수	김양규	김용숙	김은경	
(사)녹색연합	강철	곽의영	권순탁	김경수	김남덕	김명철	김보라미	김성수	김양수	김용술	김은경	
(사)민족화해협력	강철규	곽지웅	권영준	김경아	김남훈	김명환	김봉규	김성욱	김영대	김용재	김은순	
(사)미래환경운동본부	강철승	곽효석	권영진	김경준	김대균	김무준	김봉진	김성일	김영미	김용지	김은영	
(사)환경정의	강태철	곽희남	권오진	김경철	김대래	김문환	김사길	김성중	김영섭	김용철	김인곤	
(사)홍사단	강현신	광명경실련	권용습	김경환	김대선	김미자	김삼용	김성철	김영순	김용태	김인봉	
	강경수	강혜정	구경이	권용우	김관영	김대성	김미진	김삼철	김성태	김영실	김용하	김인숙
	강내원	경규현	구미공공개발운동조합	권용희	김관용	김대중	김민수	김상경	김성필	김영은	김용호	김인영
	강대수	경민수	구성찬	권윤정	김광배	김대진	김민식	김상균	김성훈	김영일	김용환	김인철
	강덕순	계충미	구수정	권윤학	김광수	김대현	김민연	김상덕	김세정	김영일	김우비	김인태
	강두현	고강석	구은경	권일민	김광훈	김대호	김민정	김상범	김세준	김영재	김우영	김일기
	강마아	고경일	구자범	권준기	김국주	김대훈	김민주	김상영	김세진	김영주	김원석	김일수
	강명구	고성순	구찬희	권준석	김군수	김도형	김병각	김상우	김소라	김영준	김원재	김재구
	강민구	고영일	권경무	권준우	김규범	김동영	김병구	김상희	김승식	김영준	김원태	김재구
	강병철	고영희	권규향	권찬	김규영	김동우	김병수	김생수	김수영	김영철	김유희	김재길
	강선미	고용	권기대	권철민	김규훈	김동욱	김병수	김서현	김숙희	김영철(일허스님)	김유신	김재성
	강성일	고은주	권기범	권혁근	김근수	김동율	김병수	김석환	김순득	김영철	김유진	김재열
	강성중	고은진	권동현	권혁민	김근철	김동진	김병장	김선욱	김순복	김예승	김유찬	김재일
	강원호	고정희	권득용	금동섭	김근초	김동호	김병재	김선필	김순영	김예은	김유환	김재하
	강은현	고지석	권만열	김갑수	김금숙	김래관	김병주	김선화	김승보	김원래	김윤기	김재홍
	강일환	고지숙	권봉철	김건일	김광태	김만기	김병주	김선희	김승우	김원배	김윤두	김재화
	강정화	공병욱	권상용	김건호	김기숙	김만수	김병철	김성균	김승하	김원욱	김윤석	김재환
	강주현	공양석	권상현	김경낙	김기열	김명균	김병철	김성달	김승현	김용남	김윤섭	김정국
	김정돈	김진명	김현덕	남시호	민수영	박선희	박익중	박춘건	백원중	손관구	신봉기	안지현
	김정민	김진섭	김현석	남원호	민희숙	박성배	박인선	박춘호	백정숙	손기훈	신봉진	안진걸
	김정석	김진수	김현성	남재걸	박건영	박성수	박인수	박치우	백종무	손무길	신상준	안철원
	김정수	김진아	김현수	남현주	박경서	박성용	박재갑	박태선	백진현	손봉호	신상진	안현구
	김정신	김진현	김현정	남호원	박경수	박성정	박재성	박태순	법무법인 문무	손상석	신선철	안호원
	김정욱	김진화	김현정	노규성	박경준	박성혁	박재성	박태영	변동철	손성국	신영철	안효정
	김정원	김진호	김현철	노범영	박광열	박성호	박재완	박한용	변상해	손성민	신영철	안희숙
	김정현	김찬동	김현희	노상헌	박광태	박성훈	박재익	박한호	변수원	손성일	신원기	안희정
	김정호	김찬석	김형규	노연경	박광현	박세권	박재천	박행우	변재근	손세욱	신용규	안희철
	김정호	김찬호	김형균	노우성	박기서	박세원	박재희	박현진	변창우	손승태	신용준	양광희
	김정호	김창균	김형조	노재원	박기영	박세중	박정수	박형근	서경원	손재운	신우현	양대규
	김정훈	김창범	김형준	노재훈	박기철	박수행	박정교	박혜란	서경호	손정근	신은정	양동호
	김제후	김창식	김형진	노정호	박기훈	박순기	박정민	박호걸	서병섭	손정아	신인철	양두석
	김종걸	김창영	김형표	노진주	박남규	박순장	박정석	박호영	서소탁	손종보	신정무	양석영
	김종근	김재윤	김혜경	노창수	박노건	박승배	박정수	박화영	서순완	손호중	신지영	양성범
	김종덕	김천	김혜숙	노해룡	박달현	박승상	박정식	박화영	서영덕	손희준	신철영	양세영
	김종록	김철	김혜순	노희철	박동렬	박승욱	박정표	박화자	서완석	송기민	신태현	양연식
	김종목	김철주	김호	라운름	박두영	박승진	박제화	박후근	서운석	송기성	신현호	양용배
	김종민	김철호	김호	류동훈	박만철	박시근	박종근	박훈	서은경	송다겸	심동준	양원표
	김종배	김철홍	김호경	류시문	박명환	박양제	박종석	박희권	서정일	송덕원	심상오	양유정
	김종섭	김철환	김호경	류양석	박미나	박영규	박종선	박희령	서정화	송미영	심순혁	양윤숙
	김종찬	김충환	김호균	류중렬	박미라	박영규	박종소	박희선	서중대	송민영	심영숙	양인준
	김종혁	김치수	김호성	류지성	박미선	박영기	박종우	박희연	서중철	송병록	심인석	양창우
	김주규	김태균	김호식	류형욱	박민수	박영남	박종원	박희진	서직원	송수영	심정환	양채열
	김주목	김태균	김호연	류희근	박민준	박영민	박종원	반영철	서한송이	송연미	심진섭	양태훈
	김주영	김태수	김홍관	마경화	박민진	박영민	박주은	방상윤	석기영	송용석	심종진	양혁승
	김주영	김태수	김홍규	마미영	박병오	박영수	박준수	방정혜	석철수	송원기	심혜정	엄원중
	김주중	김태완	김홍업	맹성렬	박병일	박영웅	박종철	방중수	선동수	송인섭	아름다운한의원	여수정
	김주현	김태진	김효선	문경식	박보성	박영철	박지원	방효창	선우인터내셔널	송인윤	아세아문화사	여해경
	김준	김태현	김효원	문광기	박삼중	박영환	박지은	배병달	선월몽산	송인철	안경숙	염규석
	김준배	김태현	김희연	문상준	박삼희	박영훈	박지혜	배보현	선종국	송재경	안규창	염진형
	김준식	김태형	김희철	문석진	박상기	박용석	박지호	배영규	설원식	송태교	안기영	예병렬
	김준영	김태형	나권일	문세영	박상대	박용정	박지환	배영환	설창인	송포명	안기정	오경준
	김준호	김태호	나기열	문소상	박상렬	박용제	박진순	배유아	성광식	송하동	안병역	오길영
	김지연	김태호	나병현	문인섭	박상성	박용준	박진아	배인명	성금성	송하복	안병준	오상준
	김지영	김태훈	나상민	문장협	박상인	박우석	박진제	배장동	성병화	송합근	안영훈	오세정
	김지현	김태훈	나순팔	문차호	박상현	박원규	박진호	배장수	성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원용	오세호
	김지혜	김평진	나일주	문태현	박상현	박원석	박진홍	배종석	성외경	신동민	안용식	오순택
	김지호	김필관	나준희	문현국	박상형	박윤수	박진홍	배천호	성옥진	신동애	안인화	오승훈
	김진	김학수	남기욱	문현정	박서희	박은아	박창욱	배홍진	성윤숙	신동엽	안재경	오용식
	김진경	김해성	남기원	민남미	박석순	박은현	박창임	백경아	소경섭	신동조	안정혜	오장환
	김진구	김현동	남상권	민병욱	박석현	박응순	박철수	백승진	소진성	신동진	안종범	오제명
	김진만	김혁	남상길	민선욱	박선규	박의용	박철주	백요한	손건일	신두철	안종한	오중현



오창훈	유희숙	이광열	이상룡	이신호	이재혁	이한길	장권	전용배	정인호	조병익	진영수	최승우	하승수	허중호	황효열	권영진	박연환	이희승	김영미	김삼수	이익현	김봉래	이윤일
오창훈	윤건수	이광택	이상범	이애화	이정규	이한민	장동민	전용일	정일용	조부근	진원석	최영국	하승창	허지영	황준주	권용우	박영웅	인선모터스(주)	김태경	김성호	이장한	김석래	이정임
오현석	윤경숙	이광필	이상벽	이영란	이정남	이한범	장두호	전우영	정일용	조성태	진유식	최영식	하용호	형성훈	황희정	권일	박완기	임경수	김태룡	김용현	이재선	김선연	이제영
오현철	윤기복	이광현	이상복	이영란	이정성	이행섭	장문호	전장호	정일식	조성하	진중화	최은아	하윤진	홍광선	한국투자증권	박정윤	임영희	김택성	김은수	이정호	김선정	이주석	
오희성	윤득구	이광훈	이상봉	이영범	이정수	이현미	장미은	정경욱	정재영	조성희	차상열	최완규	하재연	홍대식	경제정의연구소	김경희	박찬우	임창규	김현아	김정철	이정우	김재부	이지은
왕경희	윤명	이규용	이상엽	이영수	이정임	이현재	장민수	정광화	정재은	조성훈	차은상	최원영	하재현	홍도천	김광만	박희정	임형백	나태균	김재기	이종수	김재준	이진아	
왕진산	윤상균	이규철	이상엽	이영욱	이정행	이형세	장병호	정덕임	정재진	조성희	차진구	최원천	하현아	홍미미	김금옥	배용규	장명진	대호관세사법인	김재원	이진만	김정근	이효숙	
원동환	윤숙자	이규혜	이상우	이영음	이정현	이형일	장보름	정동영	정정래	조순열	참여연대	최유영	하현진	홍성균	강영철	김기성	법무법인 나눔	전국노동조합	박병식	김정웅	이현희	김진숙	장선애
원영진	윤어림	이규성	이상윤	이영중	이정후	이혜숙	장석림	정란아	정정래	조순홍	채대영	최윤재	한건희	홍성진	곽수근	김덕기	법무법인 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박인동	김정진	이화용	김진욱	전규화
원재환	윤영근	이근식	이상윤	이영채	이정희	이호경	장석춘	정만중	정재용	조승환	채민성	최은식	한국에너지개발	홍성진	김소연	김도영	변창흠	전은호	서경수	김정현	임명선	김태희	전방욱
원종호	윤영천	이근조	이상진	이영현	이정희	이호섭	장승진	정명채	정종원	조연성	채예정	최은진	한국은행노조	홍성환	김지환	김동식	서민호	정도유아이티	신화권	김제천	임홍승	김학균	전영권
원혜영	윤은선	이근태	이상진	이영호	이종규	이호욱	장심영	정미숙	정주연	조연정	채원호	최은철	한바름	홍순영	김혁	김미경	서순탁	정동영	심제원	김종구	장인석	김형경	정광민
유경희	윤은주	이근환	이상철	이용근	이종길	이화영	장영식	정미화	정준수	조영문	채준하	최인숙	한상윤	홍승우	노영록	김병수	서영엔지니어링	정성훈	유주상	김주호	장형원	김형근	정석중
유관영	윤인오	이근희	이상현	이용만	이종민	이화주	장영오	장병순	정중식	조용기	채홍석	최인호	한상일	홍영희	문인철	김병재	소비자권민회의	정애리	이대순	김진영	전귀정	김형식	정세환
유기석	윤일성	이기승	이상희	이용배	이종수	이훈	장영환	정병오	정지연	조은호	천대웅	최일	한상훈	홍오성	박상안	김석기	신형숙	정인환	이덕우	김창석	전미옥	노영성	정의호
유기천	윤재석	이기우	이석규	이용선	이종열	이희중	장욱	정병철	정지원	조일흠	천민승	최장원	한석웅	홍인표	백승호	김성수	심재민	조돈철	이명근	김태환	전영선	박상덕	정의훈
유기청	윤정섭	이기웅	이석기	이용승	이종윤	인천경찰서	장원규	정성룡	정진민	조재연	천병우	최재용	한선아	홍중학	백종효	김세용	심준신	조우현	이순기	김학성	정동욱	박운남	정현석
유기현	윤종길	이기호	이석범	이용운	이종은	인천시	장원택	정삼미	정창률	조재호	천세완	최정욱	한성철	홍중화	성호준	김수삼	아이티엘코	조재형	이영길	김형만	정명자	박인재	조무현
유남식	윤종빈	이낙연	이석연	이용한	이종창	일허스님	장원택	정석희	정창운	조정근	천승걸	최정표	한소람	홍준표	손창민	김영	양우현	채원호	이지연	노귀남	정승훈	박중시	진수환
유덕열	윤종호	이낙원	이석제	이운향	이종희	임건목	장유리	정선혜	정대근	조종철	최광규	최종일	한승구	홍준현	송운학	김완배	양혁승	천안경찰서	이진	당명숙	정창현	박지호	최규천
유동진	윤종식	이남경	이석진	이용립	이주하	임광재	장유환	정선화	정대영	조주희	최광석	최준용	한승호	홍진구	어은미	김재령	한국투자증권	최강림	이창수	목영주	조광환	반태연	최복규
유록수	윤지원	이다혜	이선신	이원관	이주형	임명호	장은미	정성남	정태성	조준범	최광웅	최준혁	한승호	홍창기	윤연철	김재익	오세형	최두호	이태호	문행구	주석부	배정순	최승길
유명진	윤진철	이대열	이상구	이원식	이준모	임상규	장재영	정성봉	정태완	조준형	최광현	최종길	한연하	화강운	이덕호	김정인	원두영	최명철	장영	박경서	차승주	서은주	최소희
유성엽	윤창원	이대영	이상근	이원재	이준영	임상혁	장종철	정성희	정택수	조진만	최근현	최지한	한영관	황경복	이승훈	김종길	윤재용	최병선	장윤정	박근해	최우진	송문길	최승룡
유송	윤철한	이덕영	이상민	이원재	이지영	임서구	장찬홍	정세진	정필성	조진수	최기환	최지현	한영철	황광열	이혜란	김종익	이경희	최봉문	장진영	박성규	최평규	송민석	최은송
유승중	윤한필	이덕희	이상복	이원희	이지훈	임석규	장철기	정세훈	정하용	조진오	최낙신	최지현	한용석	황기명	임효창	김준현	이동근	최윤정	전종찬	박용현	최효창	송재석	최종문
유애지	윤효상	이동석	이상재	이유열	이진경	임성희	장형환	정승상	정해석	조철제	최다니엘	최지훈	한용환	황도수	정길재	김철홍	이만희	최정우	정경수	박은주	추재훈	신미영	한동준
유연삼	음유정	이동엽	이상형	이윤규	이진영	임세은	장혜령	정승인	정혁제	조현성	최덕천	최창배	한중우	황민호	정홍준	김태호	이명수	최환용	조영관	박준우	한광수	신성진	한일광생협조합
유연식	이갑수	이동주	이소영	이윤배	이진원	임영환	장홍석	정승준	정현근	조현익	최덕호	최창호	한대경	황선영	천미림	김현동	이병준	포스코	추승우	박준형	한정훈	신승춘	홍용표
유인상	이갑수	이동준	이승수	이윤상	이창섭	임용기	장희곤	정승화	정혜승	조형준	최명희	최철호	한홍열	황선용	최재윤	김형욱	이상학	하동익	하성용	배인교	한준구	심규만	홍진원
유인환	이강운	이동한	이수연	이윤선	이창엽	임웅찬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연섭	정혜승	조희근	최민	최철호	함께하는시민행동	황선원	하능식	김호현	이상협	하성규	배종근	홍명근	심윤보	황은남	
유일용	이건호	이동호	이수영	이윤호	이창호	임장원	전기호	정연욱	정희성	주권자전국회의	최범식	최철화	함도용	황선영	홍창식	나경준	이순배	한국YMCA전국연맹	통일협회	서관승	황대중	심재상	
유재경	이경도	이만호	이수현	이은재	이창희	임재익	전대홍	정영욱	정희창	주상희	최병오	최혁	함동균	황영미	황은경	나인수	이양재	한국YMCA연합회	송정호	심현섭	거제경찰서		
유재욱	이경락	이명진	이숙희	이의영	이철우	임재환	전명석	정왕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주익철	최봉문	최효영	함두호	황유경	황정호	노두승	이유미	함승희	강만성	신경화	강릉경찰서	양창훈	
유재혁	이경수	이명천	이순기	이인영	이춘수	임재환	전병순	정용수	조강훈	주인권	최석준	최홍엽	함형욱	황이남	노용래	이은재	허도한	강은석	신영욱	원경숙	강경수		
유종성	이경숙	이명훈	이순배	이일권	이충현	임정규	전병식	정용화	조강희	주찬식	최성수	최희수	허남중	황이숙	도시개혁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이재문	현철재	고석주	신종성	고석태	윤도현	강성배
유진상	이경우	이모세	이순용	이재걸	이태영	임종필	전봉양	정은수	조건영	지동섭	최성실	최희수	허동일	황인구	도선봉	이정성	황희연	고유환	안춘훈	고재정	윤성원	강윤영	
유평준	이경중	이법재	이순한	이재길	이태용	임창빈	전봉진	정원철	조경민	지동익	최성주	최희준	허병권	황인선	고일두	류성룡	이정식	곽일환	위정희	구광범	윤순모	강정숙	
유해신	이경태	이병관	이승근	이재욱	이태진	임태영	전상룡	정원희	조광현	지영근	최성현	추동균	허석	황인찬	공병준	류중석	이정아	시민권익센터	권수복	윤영건	권상동	이광중	강정효
유항임	이경필	이봉숙	이승대	이재완	이태호	임현진	전상용	정윤영	조광현	지영석	최세환	축성암	허수범	황정국	곽도	민범기	이제선		김근식	윤태룡	권오석	이귀녀	강지은
유혜영	이경희	이봉형	이승섭	이재운	이하인	임효정	전상욱	정윤채	조광희	지용태	최수만	크레텍(주)	허원철	황철진	곽충삼	박경남	이주희	김강준	김동규	이기자	김남두	이규승	강창수
유호성	이근섭	이봉훈	이승우	이재은	이학수	장경완	전성철	정의호	조규홍	지정희	최수진	프리임인드스트리(주)	허익배	황현석	광명경찰서	박상위	이창수	김상헌	김민식	이승규	김남영	이숙희	강학도
유희동	이광섭	이상열	이시연	이재임	이학용	장경태	전영진	정의훈	조민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최승섭	하상준	허정준	황호식	구지훈	박성우	이현주	김석기	김병조	이우영	김동명	이요한	경명자



고석진	남덕희	오성관	조오현	김기석	박익관	이지애	광명경찰서	김민재	노신복	박태준	심해진	이승재	정찬규	광주경찰서	김성국	대광새마을금고	백익순	오미정	이현희	조성식	황동현	김희철	이태동
고영주	남원식	오성주	조하영	김기중	박진만	이창안(철우스님)		김범운	노용래	박형근	안경애	이승규	정하준		김석용	대중종합건설(주)	백종기	오신석	이형호	조인형	황보관석	나효훈	임은기
권대용	남희정	오순혜	지영배	김동명	박진용	임배근 (주)테세리사이클링	김봉화	노혜숙	방소현	안석모	이승봉	정학균 (유)용진에너지	김성일	대창운수(주)	버스조합	오지혜	임기춘	조재근	황윤용	노상진	임주석		
권민호	노승복	육근호	진성우	김동우	박치만	임보향 (주)한울	김상열	노희준	배권식	안철환	이양희	정혜경 (주)금동산업개발	김성호	류한호	변동철	오지홍	임동춘	조정순	황의민	라병희	장기태		
권영화	노재남	육방호	진희재	김만규	박태광	장은주 (주)화영운수	김선호	류경희	배덕현	양금석	이언주	정희균 (주)대명상사디씨티	김수영	명노민	변원섭	오지홍	임동훈	조정순	황인창	박성도	장문석		
기산종합건설(주)	노재천	육준금	최삼주	김용룡	박현덕	전용범	강귀덕	김성자	류미숙	배준	양기대	이연숙	조범상 (주)대한가스산업	김순재	모현숙	변재영	유방실	임성태	조현지		박성표	장세광	
김경섭	류금렬	육충석	최선중	김범조	방지홍	전진대	강성철	김소윤	류정희	백정순	양승오	이영신	조상희 (주)사랑방미디어	김양두	문병규	서민호	유영표	임숙경	조형수	구미경찰서	박순이	장종길	
김경수	문상필	육혁수	최병중	김병수	배의용	정병열	강신재	김수연	마이인	법무법인 신하	양정현	이영희	조아라 (주)스튜디오스튜디오	김양지	문정찬	서상기	유현	임영범	주경남		박영주	장준우	
김대봉	박광호	우정숙	최은용	김보성	서선자	정복근	강옥영	김수진	문종철	변미애	양철원	이원영	조은하 (주)영무토건	김영규	문혜옥	서상기	윤두중	임정훈	주낙균	강명천	박응도	장훈성	
김민수	박대기	원소실	최윤숙	김부석	서영기	정석호	강옥희	김승복	민찬식	변성수	오명희	이윤식	조태섭 (주)영암마트	김영길	박광복	서수연	윤봉란	임정희	주식회사 라인건설	강승수	박재욱	전윤한	
김상기	박명옥	원종태	최정환	김성용	서홍기	정연권	강윤숙	김애란	박경옥	변한주	오민석	이은경	조해성 (주)중원산전	김영남	박남규	서재형	윤봉영	임종철	주호연	강신용	박정구	전호갑	
김상일	박성호	유차상	한기수	김성우	손경익	정용옥	강주례	김연옥	박계량	서두원	오성남	이은영	조화경 (주)해양도시가스	김영선	박미정	서정훈	윤영수	임한필	중흥건설(주)	고영호	박주영	정제봉	
김석준	박수정	유천업	한은진	김연옥	손성목	정훈영	강찬호	김영근	박광수	서방자	우동훈	이은재	조홍식	강신주	김영현	박병규	서해자	윤원진	임현철	지명순	구자근	박형진	정진수
김선심	박순옥	유태영	한인숙	김용철	손수호	제수경	강희규	김영미	박기은	서복원	우병설	이재춘	주식회사 포엠개발	강은섭	김영환	박병기	선종아	은광석	임형채	지병근	권구일	백승국	정택균
김성진	박애숙	윤강원	한장용	김우경	손영태	조덕수	광명시립미술관	김영필	박문경	서삼례	우혜정	이정희	주태진	강정미	김용채	박병일	설상옥	이강천	임형철	지현도	권보	변창우	정택동
김세린	박용안	윤길정	허철수	김정제	손용락	조영화	고영원	김용관	박미경	서순자	원범재	이중석	지미선	강현수	김용태	박상규	성인규	이기만	장의수	차현승	권순서	소광진	조경래
김수현	박인근	이 현	허추구	김창호	송성수	조희창	고완철	김용길	박미영	서용원	유수연	이필상	진장호	고근	김윤중	박상원	성현출	이길남	장익	참여자치21	권윤택	송장호	조동현
김순옥	박정희	이경희	허희경	김철년	신수철	주상중	고재원	김원선	박미정	서유리	유현지	이현우	차성미	고려가스(주)	김인수	박성수	소범환	이동민	장진상사	채인기	김윤옥	송철원	조현수
김승한	박주홍	이광재	현정미	김철수	심정보	지병구	고형복	김윤권	박미정	서은경	유흥우	이혜수	차정은	고려가스(주)광주	김일술	박수인	손성만	이명구	장휘국	천재영	김효양	신미정	주광정일(주)
김영우	박태원	이신학	홍성태	김종로	안재철	최민경	곽도훈	김윤옥	박미화	서이석	윤승형	이혜진	최경화	고영삼	김일호	박양우	손점식	이민원	전창주	천형욱	김경훈	신주식	지대근
김영화	반영진	이상귀	황분희	김태걸	양철영	최병철	곽병미	김윤재	박민관	서태원	윤종미	이혜진	최문교	고형석	김재석	박영덕	손희정	이봉주	전홍모	천홍석	김귀화	심재필	최근애
김옥희	배기수	이상미	황정득	김해숙	엄자부	최상호	곽은	김윤호	박민영	석학주	윤진원	이호석	최미근	공수현	김재중	박옥란	송광운	이상길	정강택	최경주	김낙관	심정규	최낙렬
김용운	배동주	이상천	황한성	김향희	오경철	최성희	광명농업협동조합	김은임	박복임	성윤경	윤철	이호열	최미영	광전민인련	김재찬	박용수	송원식	이성각	정두숙	최성중	김도형	양진오	최선호
김원용	백세정	이성호	황황욱	김혁동	오영석	최암	광명상공회의소	김은진	박상윤	성인숙	이강순	이호성	최상철	광명시장애인체육회	김정주	박용	송윤주	이성근	정병호	최영남	김동욱	엄상섭	최원호
김잠이	백순환	이양식		김현근	오현옥	최원호	광명시농업협동조합	김재성	박서운	손선주	이건복	임심례	최영자	광주상공회의소	김정훈	박이화	송태석	이성길	정상문	최용석	김민환	오영재	표상욱
김점수	백승일	이외자	경주경찰서	김현철	왕서정	최인찬	광명첨기아토티큐	김정	박성국	손슬이	이금숙	임선희	최재석	구희선	김종오	박인기	송태중	이숙향	정영일	최윤정	김보준	윤달근	허영백
김정주	서주중	이은경		김형수	우호식	최임석	구교형	김정숙	박성배	송경섭	이기영	임진희	최철규	권충화	김주현	박정열	송형일	이승노	정용완	최정규	김봉교	윤상훈	허진
김종태	손성미	이장영	(주)신화종합건설	김홍국	윤병길	최정희	구차환	김정자	박성영	송금옥	이길숙	장선	추규호	금호홀딩스 주식회사	김중태	박종근	신은희	이연	정원태	최주영	김연고	윤종석	홍인수
김종현	손은희	이장표	강명근	김홍규	윤상연	최춘자	권도형	김종임	박승원	송혜선	이로사	장영기	티제이티(주)	기우태	김지인	박종렬	신재안	이영기	정윤남	최진규	김요나란	이관순	
김철관	손정식	이정택	강신희	김홍기	윤정수	최현익	권순남	김종진	박영훈	스카이영어학원	이말복	전광섭	하숙례	김경미	김창재	박준근	신주환	이은방	정은수	최창구	김윤희	이덕수	군산경찰서
김청집	손진일	이종우	고우승	도형수	이관	최홍배	권혁이	김진경	박옥남	신기람	이명숙	전종석	한금희	김경원	김철현	박찬숙	신흥택시(주)	이을용	정일용	하우연동구교육원	김은희	이명숙	(유)은파정려문화원
김충근	송수영	이주일	고주현	마태근	이상수	최환호	금강정사	김진숙	박은경	신동렬	이미경	정도환	한상미	김경현	김해룡	박창기	심재훈	이인수	정충현	하주아	김인순	이명희	(유)은파정려문화원
김판열	송오성	이철용	곽정섭	문성현	이성민	한동훈	기아오토광명점	김진일	박재철	신민선	이미희	정민정	한윤선	김광영	김현	박창수	안병주	이재석	정진철	한국씨엔티(주)	김재욱	이미경	(유)장원물류
김판희	신미경	이형로	권기흠	박귀룡	이성조	한성우	김경태	김학준	박재희	신복인	이민지	정병오	한홍기	김기보	김현모	박창현	안샘물	이재윤	정찬용	한국미래산업협동조합	김재훈	이미숙	(주)제부두개발사업소
김필성	신미애	임주억	권순호	박봉찬	이수우	한순희	김경표	김현정	박정선	신선영	이병렬	정상영	허기용	김길현	김현석	박철웅	안용훈	이정근	정현철	한영석	김중배	이상도	1001안경콘택트수용점
김한기	신부연	장석주	권영국	박상민	이수향	한옥련	김경화	김현정	박정욱	신성은	이병순	정선유	허정호	김남수	김현중	박태규	양동윤	이정량	정혜경	한샘	김중을	이상철	CJ 대한통운
김현호	신용호	전갑생	김종구	박성준	이영화	황도연	김기영	김현희	박종기	신숙진	이병철	정애숙	허정은	김대원	김현철	박형철	양명희	이정주	정혜련	한신구	김준희	이영애	강왕근
김형탁	신찬숙	전기풍	김기형	박성진	이운주	황분희	김남권	김혜정	박종미	신영옥	이복자	정유석	허창순	김동현	나미영	박형철	양진환	이정학	정환채	한희주	김진익	이원재	고계근
김호영	심재국	정보건	김경대	박세영	이유형	황진환	김남현	김효숙	박주한	신윤철	이부순	정은영	홍은선	김민수	나병철	배백호	양현인	이종성	조경록	허기석	김철광	이원희	고덕영
김호일	안미나	정석윤	김경아	박세정	이인형	후민뱅크(주)	김남희	김희수	박준서	신은숙	이상봉	정인애	홍진호	김미남	나성영	배용태	양혜령	이종택	조광득	허문수	김현미	이정건	군정에너지(주)
나기석	양끝선	정선우	김경호	박옥선	이재인		김다솜	남기표	박진기	신혜정	이석석	정중환	황동식	김병철	나홍덕	백석	엄창수	이준영	조교영	형민우	김휘연	이제수	김동희
나양주	엄수훈	정인식	김광진	박용대	이정윤		김동범	남윤화	박진석	신혜진	이성숙	정지선	황인란	김보현	노희정	백석세우회계사무소	여상구	이학균	조남순	홍영신	김홍진	이종률	김부영
남기원	여정애	조승재	김구영	박익일	이종대		김미란	노병일	박준선	심상록	이성진	정진우	황재연	김성겸	남영환(주)에이앤씨	백승철	오경례	이한국	조선익	황덕자	김희덕	이창형	김영혜



문경환	이상춘	문태시	이호	권윤집	김윤호	박병준	심준섭	이상화	정경선	허남렬	김명제
박은아	이석진	문현미	정일환	권태윤	김재범	박병호	안병천	이석형	정문정	허인설	김명주
박중훈	이선덕	민경환	정희상	권택중	김정렬	박승철	안영석	이선혜	정성윤	홍승용	김병국
성광문	이유철	박광근	조승현	권휘동	김종건	박영식	안정항	이성	정연욱	홍승철	김상환
세종기획	이종암	박만호	조용문	기일형	김중웅	박은영	안화석	이성철	정영모	홍희청	김성민
심규만	이희재	박병돈	조용식(명신한의원)	김성민	김종태	박재열	양우준	이수직	정영은	황광석	김성용
씨제이대한통운(주)	임구원	박상석	조종석	김강식	김종태	박종률	양원규	이수호	정은숙	황귀선	김승일
이원	전균섭	박연희	주식회사 대원건설(주)	김간식	김지현	박종익	엄봉훈	이연재	정은향	황락규	김양호
정동원	정경조	박영훈	채신덕	김경민	김진호	박종철	엄인용	이용세	정인식	황병일	김영기
조경민	정태영	박정민	최영미	김남훈	김창수	박준상	에스제이건설(주)	이윤호	정재근	황정현	김영주
최웅	조용석	박정원	최재웅	김대식	김천일	박차상	여우현	이장수	정재영	황중숙	김영희
최종희	조재웅	배건웅	한성식	김대진	김대선	박한승	여은상	이재민	정창길	김영희	김영희
페이퍼코리아(주)	차숙희	백중일	한재혁	김도영	김태수	박해식	여택동	이재일	정태완	대전경실련	김욱
홍관표	최경용	신경하	한혜경	김도한	김태우	배기재	영신건설(주)	이재필	정한영	김원희	김원희
흥기원	최홍식	신명순	허우섭	김도형	김태환	배병두	오병찬	이정웅	정해용	(주) 알루코	김은주
	하수진	신상천	홍석만	김도형	김해철	배석운	오철환	이종경	조광현	(주)경림엔지니어링	김용배
군포경실련	한성수	심상웅	홍성도	김동석	김현수	배은정	우동락	이지영	조락현	(주)금성백	김인철
	호희국	심영섭	황인문	김동철	김현조	백승호	우형택	이진태	조방희	조주택	김재경
곽윤열		안철환	황인순	김명수	김형수	변규현	유성근	이진현	조상제	(주)동그랑	김재석
국정아	김포경실련	안호열		김명혜	김효진	변부형	유성호	이진희	조영도	(주)마루농산	김종선
권영훈		양영재	대구경실련	김무중	나영희	변호세강익법률사무소	유영익	이창건	조용원	(주)알루코	김종하
김대욱	(주)신원렌터카	어중석		김민한	남동강	서명대	유영환	이창용	조인지	(주)하나은행	김종학
김동별	강명자	엄선덕	(주)남캐슈너케이프	김민희	남동현	서정길	유왕근	이태용	조정학	충청사업본부	김주홍
김동조	권재형	오미애	(주)달구벌버스	김미화	남윤환	서종철	윤동섭	이해숙	조찬호	(주)한마음푸드시스템	김지윤
김석현	김남규	오홍미	(주)대구백화점	김민석	남인철	석정태	윤태우	이형태	주식회사 남원아이엔지	강다은	김진숙
김연승	김두관	웅심이칼국수	(주)대구은행	김병구	남정군	성영락	윤현식	이호석	주태환	강명자	김창근
김영수	김문경	원용벽	(주)명덕건설	김병규	노광해	성윤상	윤홍식	이희영	지우	강병규	김창숙
김영희	김미자	유영록	감신	김상돈	노영희	손광락	이강태	임종오	진연수	강재규	김춘길
김종수	김영로	유호석	강연환	김상진	노윤경	손상호	이경민	장석희	차진근	계룡건설산업(주)	김충신
김창호	김옥순	윤명자	경희창	김석동	대구서비스업조합	손상홍	이경애	장우석	최동학	고나현	김태연
박정민	김용훈	윤미숙	계양엔진종합상사	김선완	대구도시공사	손수익	이경탁	장은숙	최우곡	곽기용	김태현
박중수	김종열	이경화	공영선	김선희	대구상공회의소	손승완	이경화	장재호	최원아	구범림	김태형
박평식	김준현	이경희	공재식	김성수	대성에너지(주)	손영호	이근원	장철규	최은영	권은남	김태호
박희찬	김진희	이금순	곽덕환	김성택	동원건설(주)	손원기	이노수	장해열	최종만	권철명	김태훈
석경수	김창집	이기형	곽동주	김승환	류규하	손효진	이동기	장호경	최준호	금홍섭	김현조
송정복	김철경	이두열	구성호	김신호	맹일영	송상수	이미정	장호열	최지원	김금숙	김현하
심상선	김형창	이부형	권기억	김영권	문상돈	송영식	이병화	전명진	최한석	김기남	김형태
심재숙	남기후	이재홍	권기혁	김영모	문인수	신명희	이병희	전상훈	최혁재	김기범	김혜천
안중호	남익선	이정규	권대우	김요한	문효상	신영남산업주식회사	이봉우	전성욱	하경태	김길순	김홍숙
양해택	도기준	이정수	권동일	김용두	박갑석	신명섭	이부용	전영권	하순화	김대석	노경욱
유애순	도현순	이중기	권병훈	김용찬	박경욱	신원훈	이상록	전영선	한국비철(주)	김동선	농협은행(현산동주)
이경은	류문식	이중준	권오숙	김용철	박동환	신홍권	이상천	전재호	한상인	김동철	대전도시공사
이상운	류승범	이중재	권오준	김원규	박병석	심병철	이상필	전형수	한중해	김명경	대전시각시인협의회

대전서비스업조합	안경래	이철은	중앙대학교병원	김대근	박세훈	오형열	조소현	강상태	김남일	김수미	김준기
도남선	안병진	이학재	지정배	김두영	박소영	원요준	조영교	강시영	김대래	김수빈	김준환
도로교통공단	안영찬	이해정	진동규	김명숙	박송춘	유경생	조용호	강예운	김대중	김수자	김지만
명을식	안재준	이현대	진동섭	김명진	박순옥	유광호	조인수	강유등	김도	김쌍우	김진
문경재	안중훈	이현숙	차정민	김명철	박송채	윤치술	조준범	강인중	김동명	김영길	김진석
문정수	엄기운	이형복	최경호	김문재	박승옥	이덕일	차경아	강정규	김동호	김영신	김진영
박경오	오세윤	이화영	최경훈	김민희	박영용	이명희	천병식	강주하	김명석	김영욱	김진찬
박근영	오원관	임동표	최낙구	김보현	박용묵	이문희	천현중	강종묵	김문규	김영욱(2)	김진필(2)
박기남	오종섭	임윤택	최미경	김상원	박인용	이범수	최명숙	강태문	김미경	김영중	김진현(2)
박기용	오창길	장복수	최봉문	김선실	박정석	이병채	최병기	강필원	김미향	김영호	김창희
박상훈	오학석	장인성	최이성	김성두	박정희	이상권	최연식	강현주	김백철	김용섭	김철도
박성원	우금옥	장인철	최장환	김성철	박종두	이성로	최완수	강형숙	김병근	김용원	김춘덕
박성진	원용철	장춘순	최정우	김수경	박종범	이인수	최일	경규성	김병기	김용원(2)	김태경
박영순	유기완	장형근	충남대학교병원	김승호	박종철	이재광	최재경	경동건설(주)	김병용	김용필	김태구
박정현	유배근	장화식	한경이	김신규	박주이	이재성	최종명	고명석	김병하	김원태	김태우(2)
박종대	유병연	전국진	한국전력공사	김영태	박창수	이정진	최호길	고순생	김보열	김유경	김태훈
박준혁	유병한	전문학	한국전력공사	김예영	박창윤	이종화	최환석	고유석	김복준	김유석	김태희
박희조	유인규	전영춘	한기평	김정민	박철수	이찬식	하상복	고인홍	김봉국	김윤영	김학진
방명덕	유인수	전학구	한명진	김정아	박한호	이천호	한상효	고재일	김봉규	김은숙	김해몽
방정희	유현숙	정대용	한성림	김종숙	박해령	이철수	한승주	고정연	김부근	김은영	김해영
배동국	윤주병	정병오	한성숙	김종익	박혁진	이한경	한대연	공병승	김분이	김민한	김현욱
백정웅	이건희	정삼배	한화교	김중호	박현희	이현중	홍건숙	곽상진	김삼문	김민환	김현재
서동국	이계자	정성훈	홍성연	김창모	박홍식	이형오	홍국선	곽원병	김삼수	김장섭	김형권
서영석	이광자	정상희	황의달	김창세	배상기	이형완	홍근표	구명중	김상길	김재명	김형균
서영안	이광진	정승래	황재익	김태중	박재봉	이홍성	홍석준	구주영	김상배	김재일(2)	김혜경
서재열	이문지	정예성	황혜정	김태현	서이채	임종석	홍순길	구효송	김상욱	김재찬	김혜경(2)
서정원	이범규	정우택		김판조	손미란	장미	홍진표	국희원	김상태	김재훈(2)	김호범
서준수	이병승	정은선	목포경실련	김하성	송미승	장종국		권기철	김상호	김정량	김홍재
서용원	이상민	정인규	김홍석	송영중	전종국	부산경실련	권명섭	김석준	김정민	김홍태	김홍취
성기석	이성일	정현재	(유엔에서생진사업단	김희환	송진호	전철균	권범현	김석호	김정수(2)	김홍취	김훈
손대근	이승복	정희대	강병국	노경윤	송홍범	전철영	(주)경성에너지	권성빈	김선년	김정숙	김훈
송민호	이승용	조성천	강병조	명근홍	송희진	정남준	(주)동원개발	권오성	김선미	김정순(2)	김훈태
송영환	이영수	조용석	강성태	문영덕	신관용	정대철	(주)롯데하이마트	권은경	김성권	김정택	남경태
송유숙	이용훈	조용태	강영태	문준석	신재범	정명오	(주)부산은행	권재현	김성근	김정현	남기찬
송인걸	이윤숙	조운제	강제석	민경준	신주환	정삼수	강경태	권태섭	김성길	김종곤	남영현
신상헌	이윤행	조철휘	강주천	민찬홍	심재경	정승임	강규성	김기아	김성수	김종구	노경조
신선호	이인세	조항범	권인철	박강일	안영하	정영창	강대영	김갑환	김성열	김종기	노상훈
신창호	이재민	조혜형	김경순	박광배	양명희	정진대	강미라	김경일	김성춘	김종민	노영욱
신현진	이재영	주식회사 맥키스컴패니	김경욱	박근영	양승희	정평국	강민석	김경조	김성태(2)	김종한(2)	노일용
신희권	이정(버리푸드)주식회사	세이디에스	김경철	박문욱	양영주	정해수	강민수(2)	김경택	김성호(2)	김주영	도한영
신희영	이정규	주식회사 현울앤비즈	김관욱	박석일	양판승	정호원	강민정	김광식	김성훈	김주현	롯데건설(주)
심영주	이종범	주옥규	김광배	박성일	여성준	조기석	강병석	김길수	김성훈(2)	김주호	류광렬
메인데이터지주식회사	이창기	주정봉	김광창	박성진	오승주	조성익	강병호	김남식	김성훈(3)	김주희	류위훈





류은영	박주원	서호영	신용삼	오지영	이남중	이일용	장선미	정애니	주식회사우학	하상철(2)	곽중환	김원일	박근철	심삼옥	이대복	장봉주	최유정	고병익	김태선	백혜련	윤두천	이창진	최인자
류종성	박진성	서효정	신유천	오철조	이덕식	이재정	장성호	정영점	주식회사신대양건설	하성훈	권중식	김유경	박덕희	심연홍	이돈섭	장성원	최종현	구본숙	김태학	변수정	윤미경	이판수	최재훈
류진호	박찬일	석승희	신이건	오대석	이동률	이재호	장영철	정용성	주안나	하순금	길목	김유리	박만용	심화섭	이동균	장은선	최지문	권후남	김해영	변영선	윤희경	이필근	최진학
르노삼성자동차주식회사	박창식	석진열	신인철	옥성애	이동윤	이정남	장윤석	정용수	주영숙	하주수	김 철	김은희	박명종	안경수	이문규	장재수	최진철	김경수	김현구	서경희	이경섭	이필근	최진환
모상선	박창호	석태호	신정희	옥진우	이동일	이정민	장재구	정우진	주재민	한기성	김경석	김인섭	박병훈	안국자	이문성	장재환	최춘파	김경호	김현태	서상범	이경환	이해균	최찬호
문상철	박철중	선석렬	신철성	왕인	이동진	이정식	장준홍	정은선	지경아	한병무	김경순	김일환	박상준	안세준	이문영	장주열	최택수	김도형	김혜련	서수정	이국희	이현미	하만호
문상철(2)	박철한	설광석	신총기	우명자	이동환	이정항	장지태	정장한	지은아	한병철	김경아	김재학	박성진	안종석	이미경	전용성	최형덕	김동선	김혜숙	서정근	이금희	이현순	하순진
문윤순	박태주	설호석	신해송	우성철	이동훈	이정호(2)	장해욱	정재동	진동식	한성국	김계남	김정수	박성한	안종원	이병선	전이령	최혜경	김동원	김효근	서정옥	이길영	이호섭	하은미
문재천	박한규	성덕주	신항남	우정용	이만수	이정환	장희정	정재호	진수진	한성안	김나영	김정식	박세찬	양연석	이봉진	정문교	최효섭	김말순	김훈	서한	이명욱	이희수	하창호
민지훈	박현욱	성병창	신현무	원희연	이명식	이정훈(2)	전보익	정종학	진효상	한재철	김남춘	김경아	박수경	양영희	이상정	정봉재	추종권	김미선	나민수	서홍석	이민규	이희숙	한경수
박경주	박희영	성영미	신혜숙	유영길	이미경	이제숙	전선임	정종화	차동박	한종석	김동수	김경인	박승민	양진옥	이상호	정상철	탁동철	김미옥	나태성	성기원	이범선	임용순	한곡지
박국순	박희정	손병렬	심미예	유수윤	이민호	이조경	전세표	정지원	차동욱	해운대블루라인(주)	김동순	김정훈	박영덕	양해준	이수영	정순희	통일에너지공인사 고영환	김미정	남택진	성현구	이범주	임태정	한상울
박도영	방성애	손봉주	심삼조	유완식	이병기	이종석	전용배	정진걸	차진구	허민도	김말순	김중담	박영희	어주하	이승재	정양언	한살림	김민수	노종용	손소희	이병훈	임혜경	한옥자
박동범	배광호	손상용	심성구	유재기	이병준	이종원	전우철	정창화	차창호	허진욱	김명섭	김중윤	박용기	엄경선	이언우	정연미	한상민	김민수	도진욱	손현미	이상명	장명욱	한창균
박명식	배성훈	손순용	심윤정	유재엽	이병진	이종철	전일수	정춘희	천상수	허해녕	김명욱	김주철	박정민	엄천수	이열호	정용주	한성희	김백규	명홍진	손혜정	이상애	장성근	한창석
박미순	배수미	손영일	심윤정(2)	유정기	이병호	이종학	전정호	정치금	천용욱	현우컨설팅	김문석	김준섭	박종갑	엄태영	이영선	정원모	한정숙	김봉균	모성은	송기진	이상해	장정숙	한풍교
박미영	배용준	손원우	심인섭	유정동	이봉진	이주영	전진영	정래영	천정호	현지훈	김미정	김진주	박종학	오광택	이영수	정윤희	함국기	김석규	문순심	송원찬	이성호	장점오	허성균
박민우	배해래	손정현	심향철	유제현	이상구	이주현	전찬일	정태호	천현수	홍경자	김병욱	김진태	박종현	오모현	이영순	정은희	함춘식	김석진	민경록	신경환	이성희	장현주	허윤범
박병만	배화숙	손창욱	심혜인	윤강훈	이상미	이주환	전현수	정하운	최규덕(2)	홍봉선	김부석	김진태	박종훈	오승택	이우영	정진용	허우린	김성연	박관우	신동섭	이수행	정계화	허재구
박복용	백대영	손창우	이영아	윤경만	이상백	이준승	전호열	정한성	최남연	홍일표	김상기	김진희	박준범	오윤택	이운연	정홍기	홍련암	김시영	박동선	신지훈	이승호	정수진	허현태
박봉수	백평호	손치훈	안영석	윤경태	이상진(2)	이중하	정경진	정해균	최달웅	황국자	김선일	김천수	박희식	오홍일	이은희	조광덕	홍명관	김연기	박선미	신한미	이영인	정순혜	홍사준
박상수	변상준	송미경	안문상	윤기혁	이상득	이진수	정광현	정해명	최민식	황범하	김선철	김철민	반영덕	원은주	이인숙	조명수	홍인숙	김영기	박선영	심재광	이영재	정양훈	홍영호
박석원	부두봉	송상연	안병록	윤나영	이상현(2)	이진수(2)	정권영	제미경	최병근	황보승희	김성권	김철수	방대식	유성봉	이재선	조성열	홍전희	김영래	박성대	심현자	이영주	정영규	홍중수
박선아	부산광역시환경청	송숙희	안연균	윤상미	이선희(2)	이창태(경성유업)	정규용	조명래	최병찬	황영식	김성근	김철환	변성수	유영민	이재정	조현국	홍천동	김영수	박승원	안혜영	이용욱	정원제	황경희
박성수	부산도시가스	송순임	안원하	윤상현	이상권	이춘구	정근	조명제	최보규	황영재	김성미	김춘식	변인미	유영창	이재홍	주대하	홍해용	김영태	박연순	양우혁	이용호	정지홍	황대호
박성철	부산시설공단	송원섭	안원호	윤석준	이상열	이학봉	정기섭	조민주	최선아	황인	김성욱	김홍남	서영기	유종완	이중섭	주영래	황보해용	김원동	박원기	양재철	이운창	정종훈	황민석
박성호(2)	부산신용보증재단	송은주	안재민	윤성미	이상형	이현민	정달식	조심현	최성관	황인규	김성울	김태균	서은진	유주희	이중식	주용현	황시영	김용석	박용환	양진하	이원욱	정태정	황성우
박승제	부산지방공무원스포츠팀	송재광	안종일	윤수성	이상환	이현우	정도영	조상희	최수영	황호선	김수근	김태영	석명환	유혜정	이중식	진장수	황영필	김용일	박원호	염규용	이원재	조경두	황용원
박시우	부산지방법무사회	송재은	양대건	윤영태	이상훈	이현재	정동만	조양래	최승환		김수자	김형걸	선영복	윤광훈	이주연	진형배	황은숙	김용철	박윤환	예인기	이윤규	조규만	황지숙
박연수	부산광역시교육청	송정숙	양동열	윤재성	이상희(2)	이현주(3)	정동열	조영규	최원석	숙초경실련	김수정	김형기	소문섭	윤규식	이중길	천성미		김웅	박은호	오동석	이익봉	조병모	
박영봉	서경국	송중두	양시경	윤재철	이승우	이훈진	정말순	조용규	최원용		김순복	김호준	손병섭	윤기순	이진여	천성필	수원경실련	김은하	박익종	오동욱	이재득	조석환	숙천경실련
박영현	서경숙	송중환	양원석	윤정현	이승호	이희길	정명길	조용언	최은주	(주)강원으로	김순봉	김희근	손재복	윤신남	이진형	최관식		김인석	박재관	오세환	이재문	조승백	
박용주	서만석	신경근	양은진	윤지석	이시화	이희전	정명식	조용한	최재명	강동우	김승길	김희정	송경희	윤재훈	이철	최근석	원주부동산연구원	김재기	박재순	오완석	이재혁	조영춘	강철호
박용한	서미화	신군재	양재화	윤지영	이영갑	임무진	정명희(2)	조유장	최재호	강미심	김승숙	남상진	송제철	윤재희	이태열	최길순	(주)영양건설 - 최영욱	김재성	박정화	오일용	이정원	조은석	김미정
박재본	서범수	신대량	양종철	윤현철	이영신	임우택	정미경	조윤득	최정욱	강석태	김승철	노금희	송종철	윤정은	이필선	최돈환	강미경	김정욱	박제현	오지현	이정하	조형훈	김선명
박재욱	서봉원	신동욱	양종필	이갑준	이영호	임종수	정미한	조윤환	최준식	강신길	김시형	동병희	신대섭	윤준	이필순	최동권	강민철	김종석	박준배	오해경	이종령	주광애	김성준
박재율	서수급	신동윤	염세원	이강진	이욱형	임호	정민재	조은정	최진욱	고선창	김연미	라용일	신선익	이건욱	이현녀	최동훈	강유정	김종선	박진소	우양미	이종만	주영훈	김중선
박재현(2)	서양수	신만석	여재호	이경학	이용주	임훈	정성문	조은플러스	최찬규	고영진	김영석	문정열	신영근	이경호	이현미	최서호	강인선	김종오	박태경	유병욱	이종주	진대운	김준영
박재홍	서은정	신병훈	오병루	이광열(2)	이원경	장귀봉	정순영	조종석	최철열	고인선	김영식	문제용	신재민	이경상	이호석	최성주	강창환	김종현건축사사무소	박현웅	유상철	이주연	진승주	김준호
박정구	서종석	신상규	오상준	이귀순	이위덕	장다갑	정순일	조지혜	최혜경	고종문	김영아	민현정	신종출	이경애	임정길	최승명	강학천	김준혁	박형순	유상태	이주현	최문태	김지훈
박정숙	서창근	신성환	오상환	이규섭	이은진	장문숙	정순화	조홍규	최희원	고현주	김영호	박경미	신창승	이관	임종희	최애리	강희정	김직란	박화진	유재성	이진성	최석환	김태호
박종덕	서현수	신승근	오세룡	이규현	이은화(2)	장문정	정승화	조효제	탁영민	공정관	김웅일	박경심	신현식	이기원	장경민	최영미	강희진	김진한	박홍덕	유제상	이찬용	최영숙	김현덕
박중수(2)	서현식	신영호	오연석	이남기	이을찬	장봉주	정신모	주수현	하나연	곽병용	김원기	박경자	신홍사	이대길	장영석	최용석	고기준	김종관	배창수	윤귀현	이창모	최인수	김혜선

필진명단

2018년 1, 2월호



나창수	고영인	김태훈	신동국	이주옥	하은희	김영학	신권대	이자형	최영식	서호영	고인정	김선우	김종원	박상철	서정순	여재혁	이경호	이은미	임철만	조종성	하태길	(주)경인방송	김경원
매일식품(주)	곽도훈	김해만	신병철	이창수	하혜경	김영환	신민희	이정림	최영준	송승하	공미선	김선일	김지혜	박선규	서희숙	여한수	이경화	이은자	임현권	조철현	하현홍	(주)동우로지스	김경태
박병희	곽대영	김현삼	신윤관	이천환	한미현	김용란	신순봉	이종인	최창규	심경택	구경혜	김선희	김진영	박선영	성주영	오근철	이광석	이의성	임혁빈	조준순	한국전력	(주)디씨알이	김경호
박재현	권태근	김현호	신장환	이필상	한수연	김은미	신승한	이지연	추은경	심재수	구준모	김선희	김진용	박성희	성희연	오명환	이광세	이익재	장경자	조택선	한덕이	(주)디에스메탈	김계원
박철우	김경미	김형욱	신청하	이해나(하용녀)	현원경	김주남	신정원	이지은	하보균	안성용	구지은	김성국	김진창	박수자	송경은	오병재	이광윤	이재범	장교환	조택선	한덕이	(주)선광	김관호
보성유희(주)	김경민	김혜숙	심규호	이희대	형천호	김주원	신희정	이철규	허부영	오경섭	권광일	김성국	김창균	박양래	송미정	오석호	이광재	이재용	장영란	조한영	한돈집	(주)영진공사	김광업
비손이앤씨	김경숙	김혜영	양근서	이희연	홍경남	김지혜	안경모	이태환	허윤희	오승석	권순원	김성길	김창수	박옥선	송영득	오성순	이광호	이재학	장왕영	주상운	한단준	(주)인천일보	김광호
서용현	김경애	김호득	양태호	임명자	홍장표	김진영	안은경	임승기	홍성원	윤주현	권순원	김성애	김춘자	박인	송영득	오성용	이기훈	이정길	장원섭	주성운	한순택	(주)장금상선	김근영
순천농업협동조합	김기범	김희궁	양현석	임미선	황연화	김창현	안정희	장승희	홍성현	이문식	권영미	김성완	김태진	박인오	송은주	오세린	이길수	이정숙	장원주	지소연	한영순	(주)진영이앤지-최준옥	김기한
신현일	김기희	나정숙	오관영	임현규	황영순	김한일	안태희	장영달	홍승희	이수현	권영배	김성재	김학경	박일엽	송이식	오형선	이길윤	이정형	장재훈	지정철	한영옥	(주)한성라인	김길자
영신창업투자(주)	김대일	남기순	오남숙	장동균	김해님	여병찬	장은혜	황규영	이식	권영진	김세동	김학재	박재선	송정호	우근배	이길윤	이종송	전상진	지호숙	한은상	SK(인천석유화학)주	김남돈	
오정록	김동인	남양숙	오은석	장동일	<b>양평경실련</b>	김한진	여현정	전미옥	황순찬	이유허	권영훈	김수동	김현미	박재우	송준규	우순애	이대현	이종원	전성호	진선종	한은상	강경하	김대중
위미영	김명연	남재애	오정순	장미진	김호수	염종	전승희	황영미	이종원	권오섭	김숙현	김현숙	박전희	송창신	우순희	이명신	이종한	전영석	차동환	한재수	강덕우	김도현	
이상휘	김명희	도원중	오진호	정명숙	김명희	김후승	오경아	전재은	황현주	이철	권오주	김순업	김형식	박전희	신계영	우종만	이미조	이주윤	전영애	차준은	한정민	강명선	김동완
이옥기	김민	류영숙	오현주	정세진	안영일	나진석	오성탁	전재현	이평호	권진형	김순업	김호열	박정하	신덕선	우현녀	이미희	이준호	정병관	채복수	한정현	강명수	김동우	
이용호	김병재	맹정임	오현주	정승현	강대우	노국환	유기용	전종덕	<b>여수경실련</b>	임호상	권혁봉	김연희	김홍태	박정화	신동신	원경희	이박우	이중재	정선옥	채홍철	한준학	강상곤	김동호
이종철	김복희	문강섭	왕은희	정안철	강병국	류효웅	유선영	정경숙	장준배	권혁왕	김영근	남기태	박종구	신동윤	원종수	이백선	이진관	정성기	천기영	한준호	강석	김두영	
이천오	김상혁	문연숙	원미정	정연주	강신우	박기두	유영표	장남선	강규호	정대훈	기보중	김영숙	남용대	박종오	신동천	원종순	이복수	이진혁	정순현	천병기	한준희	강석철	김락기
임중채내과의원	김석용	박경용	윤명숙	정용기	강원정	박민기	윤경일	정동균	강성훈	정승환	김 준	김영자	노필원	박종욱	신두임	유경윤	이부경	이찬우	정승수	천재영	한희자	강신원	김명석
장동식	김성봉	박경중	윤상민	정우혁	고혜란	박석두	윤덕규	정연준	강용원	정정식	김강산	김영자	<small>두레주류항진사거리점</small>	박준모	신영호	유상열	이상년	이창규	정용희	최근우	함연자	강옥엽	김명제
장문석	김세원	박경태	윤성웅	정은수	구민진	박수경	윤성미	정영수	고용국	정주현	김경건	김영준	류성민	박진형	신원재	유상희	이상원	이창수	정옥형	최대규	함연자	강일형	김미경
정순관	김송철	박근자	이갑순	정은식	권수연	박수형	윤수영	정주영	공성식	정차섭	김경률	김영춘	류시근	박진형	신은순	유승열	이상태	이창수	정유리	최동규	허림	강장호	김미경
정은희	김영림	박기욱	이강숙	정은혜	권오병	박소영	윤정원	정초연	권동채	정치훈	김경림	김예론	마상호	박창근	신종욱	유재경	이상혁	이천수	정윤지	최명섭	허병석	강태경	김미영
조남훈	김영숙	박동신	이경란	정이진	김경덕	박애경	윤종대	정하성	권인홍	제성명	김경자	김옥자	마석홍	박창근	신종욱	유재춘	이석환	이철희	정윤희	최병주	허수행	고덕봉	김병우
조택용	김영애	박상호	이경석	정정순	김경수	박옥경	윤형로	정혜경	권진구	제윤경	김경중	김왕곤	마석홍	박창렬	신철승	유학선	이신	이춘석	정은영	최병탁	허임범	고동희	김병철
주지은	김영희	박성진	이경진	정주호	김경희	박윤숙	이경우	조경송	김동식	조현혁	김경화	김용섭	마세진	박태문	신해진	유혜란	이선정	이충일	정은희	최복순	허임범	고려고속웨디(주)	김봉수
한지은	김옥경	박송철	이근미	장진옥	김광윤	박은정	이광자	조소연	김동채	주춘	김광수	김용태	마애진	박태문	신현숙	윤광석	이성규	이충환	정인우	최성동	허준환	고재성	김상길
현고(임승남)	김옥수	박은호	이미숙	정철욱	김대우	박장수	이그루	조재국	김미순	천상국	김광수	김우재	목현실	박형국	심관보	윤남선	이성훈	이판용	정일구	최성원	현주섭	고정규	김상섭
형근혜	김윤재	박정희	이민근	제종길	김덕현	박태원	이길한	조춘선	김성춘	한병세	김광식	김운경	문미자	박홍재	심규대	윤남용	이순창	이학수	정정순	최옥명	홍경아	고태성	김상열
홍상우	김윤희	박종호	이벽희	조경래	김동운	박현일	이대형	조형욱	김숙자	한해광	김광인	김웅제	문승욱	배경희	심형모	윤미애	이승남	이한표	정진학	최용철	홍성동	공규현	김선홍
황의병	김은주	박준연	이병욱	조민철	김동현	방민경	이동연	조현주	김영표	홍춘식	김금녀	김은이	문연래	배정수	안병운	윤수영	이승현	이해철	정춘화	최은실	홍원표	구자길	김설
황인용신경과의원	김정란	박태순	이상현	조안호	김명주	배만병	이동준	조호미	김유성	김기석	김기열	김은하	민승례	배중열	안봉섭	윤수영	이상순	이현호	정하근	최인근	홍은하	권경자	김성근
	김정숙	박해부	이선희	조재기	김명혜	배연정	이명규	지은숙	김정선	<b>인천여주경실련</b>	김기열	김은희	박경룡	변영구	안신실	윤준호	이영우	이현희	제영기	최인식	홍종민	권남구	김성수
<b>안산경실련</b>	김제동	박홍래	이숙경	주만수	김미란	서동일	이미순	지은주	김종구	김기은	김은희	박경미	변정해	안재영	윤태범	이영채	이호영	조경국	최재화	황경애	권대현	김성태	
	김종길	박희경	이숙란	최경숙	김민섭	서시은	이병은	진랑규	김향우	강경묘	김기태	김의섭	박기환	변정해	안정민	윤태범	이영현	이호일	조계만	최정관	황규문	권미정	김수자
강경호	김지영	백영국	이양주	최복수	김민정	서진숙	이상건	채 현	김현태	강석림	김길홍	김인기	박명순	부태길	안창호	윤향숙	이영훈	이훈	조길문	최정숙	황규문	권오경	김승남
강기성	김지훈	서정열	이옥례	최영화	김선자	선유하	이선희	채몽욱	나형선	강신욱	김대축	김재순	박영철	빈종진	안철한	윤혜숙	이옥희	이희상	조남술	최정화	황인동	권오연	김승진
강수문	김창근	서해경	이옥희	최운	김성민	성종규	아수진	천귀선	박병규	강영애	김두환	김재임	박병건	빈종진	양정분	윤희태	이용근	임명원	조병돈	최종	황인재	권윤희	김승희
강수진	김창모	석진성	이용진	최윤정	김수은	송명원	이승용	최갑주	박성현	강정순	김미혜	김재홍	박병대	<small>사단법인에이트셀링</small>	양희진	은종원	이용만	임선미	조생남	최종	황현숙	권옥한	김시철
경삼수	김창하	설준순	이용찬	최임이	김순옥	송애영	이연이	최두영	박숙희	강창영	김병기	김정범	박상옥	서성원	어덕경	이강문	이용연	임성규	조용철	최종악	권정호	김연옥	
경창수	김철환	성준모	이정미	최재우	김강수	송영배	이연호	최석운	배선주	고경애	김병수	김정수	박상용	서원교	엄기홍	이강수	이우정	임성식	조은미	최준봉	<b>인천경실련</b>	권혁철	김연옥
고관	김초환	송기범	이정민	최재림	김연호	송요찬	이용성	최성범	서문석	고옥자	김봉덕	김정천	박상임	서은숙	엄태희	이경수	이운용	임승한	조정래	최현희	(사)공정무역인광장	김갑봉	김영국
고미나	김춘호	신남균	이정아	최현수	김영선	송진원	이의협	최소영	서영남	고윤지	김상실	김종복	박상천	서재호	엄희용	이경수	이윤숙	임은혁	조정숙	하맹수	(사)공정무역인광장	김갑봉	김영국



김영수	남흥우	박형수	심연섭	이다빈	이창운	전영진	차경열	홍애경	송약용	최요일	장건원	김광섭	박정은	현영철	김혜영	유진영	조강석	강태재	김규설	김수환	김재학	김홍구	류재형		
김영옥	노국진	박종열	심정순	이덕환	이창훈	전용성	차광윤	홍옥표	심동희	최원영	전영렬	김광일	변성언	현중철	김홍철	윤권중	조미경	강현구	김규원	김소구	김정문	김홍성	류지봉		
김영준	노승환	박종철	배민우(인대내과)	이도형	이철준	전우진	차동열	홍인성	안수현	최정일	정승룡	김기훈	변정철	현창석	김효실	윤일규	조영주	강호문	김기영	김순영	김정승	김한국	류진호		
김옥산	대한건설협회	인정영(의대)	방광설	안경수	이도희	이중우	전준권	차득기	홍인식	안정훈	최종렬	진남희	김남혁	변종욱	홍기홍	나이란	윤정섭	조하심	강호승	김길후	김승환	김정웅	김황래	류찬걸	
김용구	도영운수(주)	방수환	안동찬	이동기	이한용	정기호	최경훈	황덕성	양영희	최진희	차운호	김동욱	부상원	홍성화	내일시스템(주)	이경숙	주진혁	경준용	김남진	김승호	김정일	김효일	류학천		
김용모	도시성	방종설	안병준	이루다	이해우	정낙식	최광용	황석광	양창훈	한상호	최성열	김동전	부윤삼		노덕우	이경원	주홍중	고금순	김대광	김애영	김정초	김희수	류현숙		
김용미	류병희	배성수	안재균	이리라	이행숙	정두용	최광은	황수연	엄상섭	홍순필	최종범	김동훈	송대영	천안아산경실련	노순식	이경주	차수철	고상돈	김대중	김양식	김종구	김희숙	리드산업개발(주)		
김용민	류제홍	배승휘	안희섭	이린우	이현경	정미경	최금행	황용선	오상현	황병해	한태석	김명준	송석언		류임상	이계환	최경식	고영구	김동암	김연식	김종기	김희식	마재광		
김우경	명선목	배철현	양광범	이문의	이현석	정석조	최두영	황은우	유창엽			김봉석	송순	(주)아라리오	류지현	이명근	최경영	고영재	김동욱	김영근	김종철	나영구	맹석주		
김원화	명창준	백동수	양익만	이병열	이현준	정석환	최병길	황재우	윤영수	정음경실련	제주경실련	김봉철	송승호	강민숙	맹창호	이병덕	최석남	공공디자인이즘	김동일	김영란	김종태	나재경	맹현숙		
김윤식	목동훈	백민섭	양희석	이병기	이형구	정성오	최상희		윤철웅			김봉희	신용현	강용봉	명진아	이상일	최신수	곽규은	김동진	김영란	김종태	남기상	맹정희		
김윤대	무의도해운(주)	백응섭	염연주	이병철	이형수	정승연	최성원	전주경실련	윤태영	강창조	강경희	김부찬	신종은	강은선	박미경	이상춘	최창환	곽나현	김동현	김영민	김주복	남기현	문성오		
김은경	문동현	범아갑수(주)	여승철	이상동	이후삼	정승용	최성진		은영주	고광호	강금중	김석	안영철	강인영	박민숙	이상호	하중률	곽덕신	김동형	김영배	김준경	남대우	문준극		
김은영	문상범	변성준	오경환	이상영	인성개발(주)	정영중	최순자	강원균	은용우	고세창	강봉석	김석범	양문석	강태윤	박민자	이서영	한광수	곽승호	김두호	김영식	김준기	남성욱	문희창		
김은환	민근홍	변태수	오광민	이상진	인명익(보수공사)	정원경	최인용	강유정	이민호	김선일	강성실	김선호	양봉석	강희두	박복연	이선열	한문식	구남휘	김말숙	김영재	김준년	남성욱	민경덕		
김응철	민동식	사단법인	인한복합(주)	오승환	이상훈	인천북항(주)	정은식	최일동	강일영	이보향	김세영	강승환	김성수	양성주	고영솔	박상면	이수현	한형규	구안서	김명수	김영준	김준수	남윤빈	민광기	
김익식	박경호	사단법인	한중기(매리협회)	오일영	이석률	인천상공회의소(주)	정재영	최재식	강창수	이선미	김영진	강인창	김성준	양시경	구본영	박수석	이순곤	허영	권경미	김영자	김영진	김준태	남일현	민선희	
김인수	박동석	사단법인	인무지계	오원선	이성한	인천상공회의소	정재윤	최재혁	강호수	이승현	김용복	강정임	김세검	양우선	구자형	박종갑	이승열	허종일	권기승	김모은	김영태	김지연	남중순	민승기	
김재경	박명희	사단법인	동원공회(전체)	우련통운(주)	이매경	인천아트센타(주)시회사	정지은	최정자	곽이구	이영식	김용철	강지용	김수남	양진웅	금명기	박종복	이원자	현선옥	권미경	김문욱	김영환	김진철	네모토	마사프구	민창식
김재식	박상문	서경욱	유동현	이연숙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정진수	최정철	국승철	이장춘	김은정	강창균	김수연	오승용	김경은	박종선	이정순	홍영식	권성안	김문중	김영환	김창석	노근호	박관주		
김재영	박상찬	서부길	유재진	이용우	인천예총(김재열)	정진오	최준혁	권미경	이재윤	김물수	강창식	김승필	오영익	김기태	박종영	이종욱	홍영중	권수복	김미라	김영희	김찬식	노만균	박광수		
김종길	박상희	서용성	유재홍	이용준	인천재능대학교	정창훈	최찬용	김만식	이점수	김일중	강태운	김승훈	오영환	김길년	박태서	이종필	황종현	권영기	김미숙	김영희	김철	노재량	박금순		
김종욱	박석민	서원경	유지상	이용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정철	최현	김병석	이정	김재오	고경업	김신소	오정훈	김문수	박필수	이종호	황천순	권오건	김미숙	김영규	김춘희	노진호	박기환		
김종호	박성인	서주선	유진성	이원구	인천항만연수원(정희은수)주식회사	최혜자	김삼덕	이현희	김진평	고광희	김양보	오창현	김미경	박현희	이재운	권오은	김미현	김영덕	김태성	녹색청주협의회	박남순				
김종화	박수영	서태원	유필우	이윤성	인천항발전협의회	정희윤	마르코(주)정희윤	김성주	임규삼	김택술	고동철	김영희	유덕현	김미수	백우현	이철호	청주경실련	권태성	김민호	김영덕	김태성	남해안(주)정희윤	박노일		
김준우	박순옥	서해안	유홍성	이은정	임강민	조광희	한국가공인(주)김민우	김수환	임성진	김현	고명효	김용범	유두석	김미숙	복아영	임승안	기경희	김병우	김용석	김태준	남양(주)정희윤	박영규			
김진영	박시우	성기건	윤관욱	이용복	임병구	조동갑	한국유업(주)정희윤	김용권	장석재	김현	고병기	김우준	이성호	김봉미	서상욱	장경식	(사)이재민(서명본부)	김갑용	김병의	김영태	김태희	대전정기(주)정희윤	박민희		
김진희	박신숙	성덕규	윤대기	이의재	임승관	조병호	한국노총인천지부	김용휘	전기환	문성대	고봉석	김원규	이숙희	김삼관	서현숙	장기수	(주)메타바이오메드	김강일	김봉주	김용학	김평환	대정건설(주)	박미애		
김창선	박옥희	성용원	윤동구	이일희	임준택	조복순	한기남	김창기	정구영	문정수	고봉수	김익태	이용민	김상철	소삼영	장명수	(주)영성엔지니어링	김건도	김상무	김영규	김필제	도경민	박미영		
김칭우	박용해	손병욱	윤명철	이재학	임채훈	조영희	한민송	김정길	정상중	박래수	고상봉	김인영	이진수	김성현	송동호	장원철	(주)세일	김건일	김상수	김원식	김학규	도선봉	박민수		
김태호	박윤수	손장원	윤미경	이재훈	임한택	조용철	한상열	김종원	정세윤	박영민	고석건	김정수	이화수	김세근	송용완	장재식	(주)엘지화학	김경애	김상웅	김유미	김학균	도승기	박민순		
김태훈	박정남	송경희	윤미선	이정림	임현준	조용화	한창원	김주희	정태원	송민수	고석봉	김중훈	임숙자	김소당	송홍석	장현순	(주)정주재활용센터	김경자	김선영	김유호	김학민	두개비실업(주)정희윤	박법혁		
김하운	박종석	삼국(주)정희윤	윤월성	이정욱	임희숙	조우성	한창인	김판용	조선훈	신현기	고성봉	김창기	임정현	김연	신동현	전승례	강대성	김경자	김선희	김윤모	김학실	두개비친구들	박석현		
김현식	박종호	송문성	윤지희	이정윤	임희진	조원민	함문숙	김형식	조영범	신형철	고영미	김창순	장원서	김용진	신영철	전오진	강민오	김경호	김성민	김은욱	김학술	디자인포커스	박성순		
김희연	박준용	송원덕	윤호	이정희	장영현	조인권	함지현	라형연	조찬완	심요섭	고영빈	김창연	정상철	김종문	안주형	전중환	강병용	김계욱	김성수	김영철	김한태	라윤애	박성호		
나영우	박진석	송인선	윤희정	이종일	장일진	조자영	함창학	류충성	주재호	안중선	고영수	김철수	조문수	김종우	양경모	정구봉	강병호	김관식	김성식	김인숙	김현상	류규식	박세웅		
나종팔	박찬화	송태영	윤희택	이주영	장일훈	조현경	허도병	박규만	진정현	윤균상	고영식	김형수	채호진	김중훈	양승조	정미영	강석형	김광남	김성중	김인자	김현주	류근모	박연수		
나종훈	박창화	시사인천	이갑영	이주용	장정민	조현준	하우범	박명진	채주석	이광호	고정훈	김형진	한남석	김진국	오수균	정병용	강성래	김광복	김성천	김일경	김현진	류근윤	박영미		
남봉현	박철현	신병철	이강훈	이준한	장조영	지석	허주형	박복희	천상덕	이상길	고태식	문건식	한용환	김진태	오승화	정병민	강성식	김광성	김성호	김재복	김형규	류덕환	박영미		
남세종	박태선	신영은	이경우	이지영	전동춘	지영일	허창희	박상민	최낙용	이상실	고행곤	박미현	한재철	김철수	오인철	정성진	강성호	김광직	김성희	김재속	김형우	류연욱	박영숙		
남종희	박판순	신은철	이귀복	이진준	전동춘	지용택	현명덕	박양림	최동성	이용관	김강문	박상미	허정아	김태명	우승윤	정진선	강영희	김광희	김송일	김재원	김형창	류용걸	박영순		
남지승	박한정	신중환	이기태	이찬우	전성식	진인주	홍기석	박호민	최문희	이창희	김경용	박승훈	현경호	김판규	유병갑	정치화	강은희	김교선	김수열	김재중	김호숙	류우열	박용석		
남창섭	박현숙	신현수	이길성	이창숙	전영우	진혁화	홍성유	성치원	최수진	임영관	김관식	박재완	현덕진	김행조	유영길	정하진	강진성	김국환	김수정	김재준	김호일	류재욱	박용연		



## 뱀때추니

바람과 사활을 걸고 싸워야 간신히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습다.



철난간을 딛고 서면 머릿가죽이 벗겨질 만큼 거센 바람에 눈을 뜰 수 없죠  
사활을 걸고 마주 서야 간신히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잘 싸워보겠습니다.